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2010 ~ 2019)

2010. 3

국 토 해 양 부

목 차

I.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1
2. 계획의 주요내용	3
II. 무인도서 관리현황	5
1. 무인도서의 현황	5
2.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법체계	9
3. 무인도서 관리의 필요성	14
4.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 개발계획 현황	16
III. 무인도서관리의 기본방향	18
1. 무인도서관리의 비전과 목표	18
2. 무인도서관리의 기본방향	19
3. 단계별 추진계획	20
IV. 분야별 추진계획	22
1. 무인도서관리 기반 구축	22
2.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35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특별관리	53
4. 교육·홍보 강화	60

V. 연차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68
1. 연차별 투자계획	68
2. 계획의 시행 및 추진일정	69
□ 참고자료	75

I.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추진경위

□ 계획수립의 배경

- 무인도서의 이용·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 주 5일 근무제 정착 및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관심 고조로 무인도서에 대한 외부간섭과 이용·개발 수요 증대
 - 특히 내륙중심에서 해양중심으로 관광형태 변화와 그 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민간부분의 무인도서 개발욕구 증대 예상
 - 한편, 정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유인도서의 무인도서화가 진행되는 등 도서관리 여건 변화
 - 전체 무인도서에 대한 통합관리 주체 및 실질적인 정책수단의 부재로 국토공간자원으로서의 가치창출 극대화에 한계 노정
- 무인도서가 해양관광·생태체험의 중심 공간으로 부각
 - 무인도서의 원시성·독특한 경관 및 생태계 등으로 여가활용, 청소년 등의 무인도서 체험이나 생태교육 장소로 각광
 - 여가형태도 '관람형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하여 무인도서를 찾아 즐기려는 레저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참여형 관광인구의 증가는 무인도서의 정확한 정보, 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
- 무인도서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잠재적 갈등 상존
 - 무분별한 이용·개발로 무인도서의 형상 및 생태계의 파괴·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그러나, 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토지소유자와 보전을 원하는 환경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으로 전망

-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 토지소유자는 관리유형 변경 요구를 위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개발이 제한되는 무인도서 내 사유 토지소유자들의 보상 또는 매입요구 등 사유재산권 행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무인도서의 해양주권 강화의 토대로서의 역할 강화
- 주변국인 일본은 「해양기본법*」, 중국은 「해도보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영해기점 도서를 포함한 무인도서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 같은 법에 의한 ‘해양기본계획’에 근거한 ‘해양관리를 위한 이도의 보전·관리 기본 방침’(09. 12. 1결정)에는 EEZ 등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이도관리 시책 언급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에 적극적인 대비를 위해 해양주권 강화 기반으로서의 무인도서 역할 증대 예상
 - 또한 199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나아가 UN해양법협약 발효(94)에 따른 도서의 법적 지위 변화로 주변국과의 주도적 해양관할권 경쟁에 대비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필요
-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관리법’이라 함)에 의하여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수립

□ 계획의 추진경위

- 2004. 8. ~ 2005. 6. :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통합적 관리방안’ 연구
- 2006. 4. ~ 2006. 12. : ‘무인도서 실태조사 연구’ 사업 실시
- 2007. 8. 3. : 무인도서관리법 제정
- 2008. 2. 4. : 무인도서관리법 시행
- 2008. 10. ~ 2009. 9.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안) 수립 연구’ 실시

- 2009. 12. 31. ~ 2010. 1. 29. : 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관계 행정 기관 의견 조회
- 2010. 1. 27. : 종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지역 설명회 개최

2.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성격

- 무인도서관리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
- 계획기간 10년('10 ~ '19년)의 장기계획
-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적용범위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
 - 우선 실태조사('07 ~ '09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시행
 - 2013년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시행
- 전국 2,876개*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에 대해서 적용. 다만, 무인도서 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특정도서는 제외
- 지적공부 등록을 추진 중인 미등록 도서 1,419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미등록 무인도서와 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변경계획에 반영
 - * 무인도서의 정확한 수치는 무지적 도서에 대한 확인과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이 완료되어야 가능. 동 계획에서는 2008. 12. 31 기준, 시·도 자료 활용

□ 계획의 주요내용

- 무인도서의 현황

-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특별관리
- 무인도서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 계획의 시행을 위한 투자계획

II. 무인도서 관리현황

1. 무인도서의 현황

□ 무인도서의 개념

-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을 의미(법 제2조제1호)

* 거주 : 사람이 지속적으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

** 등대관리·항로표지의 운영 및 군사상 목적 등을 위해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인도서로 인정(법 시행령 제2조)

<참 고>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상 개념 :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을 '무인도서등'으로 규정
- 사전적 개념 : 대양·내해·호소·대하 등의 수역에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를 섬이라 하고 그중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무인도서로 정의

- 무인도서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성, 육지 등 외부지역으로부터 분리된 고립성과 공간면적이 매우 좁은 협소성이라고 하는 섬이 갖는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
 - 특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적 면적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유인도서보다 큰 물리적·심리적 거리감 존재

□ 무인도서의 가치

- 육상생태계와 다른 환경을 가진 무인도서는 해양생태계의 보고이자 자연환경·생태교육의 잠재적 가치 보유
 - 우수한 지형·지질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한국고유종 등의 서식 또는 도래지로서의 역할 수행
 - 해양생물 및 어족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어민의 토착 지식에 의한 해양자원의 보전과 활용에도 큰 기여

-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 해양친화적 여가활동 증가로 해양 관광·레저의 전진기지로서의 무인도서 가치 증대
 - 육지 지향적 여가형태에서 벗어나 바다를 즐기고 체험하려는 인구의 저변확대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이용·개발 수요 확대
- 해양영토(영해·EEZ·대륙붕 등)의 바깥 한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 소재 무인도서*는 해양관할권 확보 및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
 - UN해양법협약 체제하에서 연안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법령과 조직을 정비하여 해양영토 확보를 위해 도서관리 정책을 강화

<영해기점무인도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법 제2조제4호)

□ 무인도서의 분포 현황

- 전체 도서 3,358개 중 무인도서는 2,876개(11개 시·도, 55개 시·군·구)로서 전체 도서의 85.65%를 차지
 - 도서 총 면적 3,757.72km²로 중 무인도서의 면적은 76.47km²(2.03%)
- 무인도서 2,876개 중 지적공부 등록 도서는 2,642개(91.86%)이며, 미등록 도서*는 234개(8.14%)

* 무인도서 실태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도서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황

<전국 도서 현황>

구 분	합 계	유인도서*	무 인 도 서		
			소 계	등 록	미 등 록
도서 수	3,358	482	2,876	2,642	234
면적(km ²)	3,757.72	3,681.25	76.47	76.47	-

* 유인도서 수와 면적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08 ~ '17년)에 따름

- 시·도별 무인도서 수는 전남(1,744개·60.64%), 경남(484개·16.83%), 충남(236개·8.21%)의 순임

<시·도별 무인도서 현황>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도서수	2,876	41	111	236	80	1,744	58	484	45	3	40	34
비율(%)	100	1.43	3.86	8.21	2.78	60.64	2.02	16.83	1.56	0.10	1.39	1.18
면적(km ²)	76.47	0.73	8.29	8.49	2.29	40.45	1.84	9.23	4.71	0.04	0.14	0.26
비율(%)	100	0.95	10.84	11.11	2.99	52.90	2.40	12.06	6.16	0.05	0.18	0.34

- 사유지가 포함된 무인도서는 1,398개(48.61%)이며, 국·공유지로만 이루어진 무인도서는 1,478개(51.39%)임

<소유형태별 도서 수 현황>

구 분	합 계	국 유	공 유	사 유	하나의 무인도서 내 복수 소유				
					소 계	국·사유	공·사유	국·공·사유	국·공유
합 계	2,876	1,327	145	1,270	134	87	26	15	6
비율(%)	100	46.14	5.04	44.16	4.66	3.03	0.90	0.52	0.21

- 무인도서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전남의 경우 무인도서 1,744개 중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수는 948개로 점유비율이 54.36%를 차지
- 국·공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40개)과 울산(3개)으로서 관할 도서 모두가 국·공유이며, 다음은 강원 97.06%(33개), 부산 82.22%(37개)의 순. 국·공유 최저 지역은 전남으로 관할 무인도서 1,744개의 45.64%(796개)
- 지적공부 등록 무인도서 2,642개의 총 면적은 76.47km²로서, 사유면적은 61.24%(46.83km²), 국유면적은 28.98%(22.16km²), 공유면적은 9.78%(7.48km²)임
- 시·도별 사유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서 70.80%(28.64km²)이고, 국유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서 100%(0.14km²)임

<소유형태별 면적 현황>

구 분	합 계	국 유	공 유	사 유
합계(km ²)	76.47	22.16	7.48	46.83
비율(%)	100	28.98	9.78	61.24

- 등록 무인도서의 지목유형별 면적비율은 임야가 90.24%(69.01km²)로 다른 지목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보임

<지목유형별 면적 현황>

구 분	합 계	임 야	전	답	기 타
합계(km ²)	76.47	69.01	1.99	0.31	5.16
비율(%)	100	90.24	2.60	0.41	6.75

- 등록 무인도서 2,642개 중 면적이 0.003km² 미만인 도서는 888개 (33.61%)로 가장 많고, 면적이 0.1km² 이상인 무인도서는 176개임

<면적규모별 도서 수 현황>

구 분	합 계	0.003km ² 미만	0.003~0.01km ²	0.01~0.05km ²	0.05~0.1km ²	0.1km ² 이상
도서수	2,642	888	667	732	179	176
비율(%)	100	33.61	25.25	27.71	6.78	6.65

- 등록 무인도서 중 육지와 거리 1km 미만인 도서는 1,392개 (52.69%)로서 과반수의 도서가 육지에 인접되어 있음

<거리구간별 도서 수 현황>

구 분	합 계	1km 미만	1~5km	5~10km	10~20km	20~40km	40~80km	80km 이상
도서수	2,642	1,392	628	146	158	131	99	88
비율(%)	100	52.69	23.77	5.53	5.98	4.96	3.75	3.32

2.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법체계

□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들

-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하여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
-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산지관리법」 등의 법률이 해당 분야별로 무인도서에 대해 적용
 - 등록 무인도서 2,642개 중 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무인도서는 73.81%인 1,950개이며 면적으로는 58.93km²(77.06%)임
 -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26개 법률에 의하여 45개 유형의 보호구역·보호지역 등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무인도서가 가장 많은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전체 등록무인도서의 69.07%인 1,825개(35.69km²/46.67%)
 - 그 밖에 「자연공원법」 386개(11.05km²),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66개(10.22km²), 「연안관리법」 81개(2.41km²) 등임

<타법 관리 현황>

구 분		합 계	타법 관리*	타법 미관리
도 서	개 수	2,642	1,950	692
	%	100	73.81	26.19
면 적	km ²	76.47	58.93	17.54
	%	100	77.06	22.94

* 2 이상의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관리되더라도 하나의 무인도서로 간주하여 도서수와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개별로 취급하는 경우 2,761개(85.79km²) 도서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무인도서를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및 개발가능의 4개 유형으로 구분(법 제10조)

<관리유형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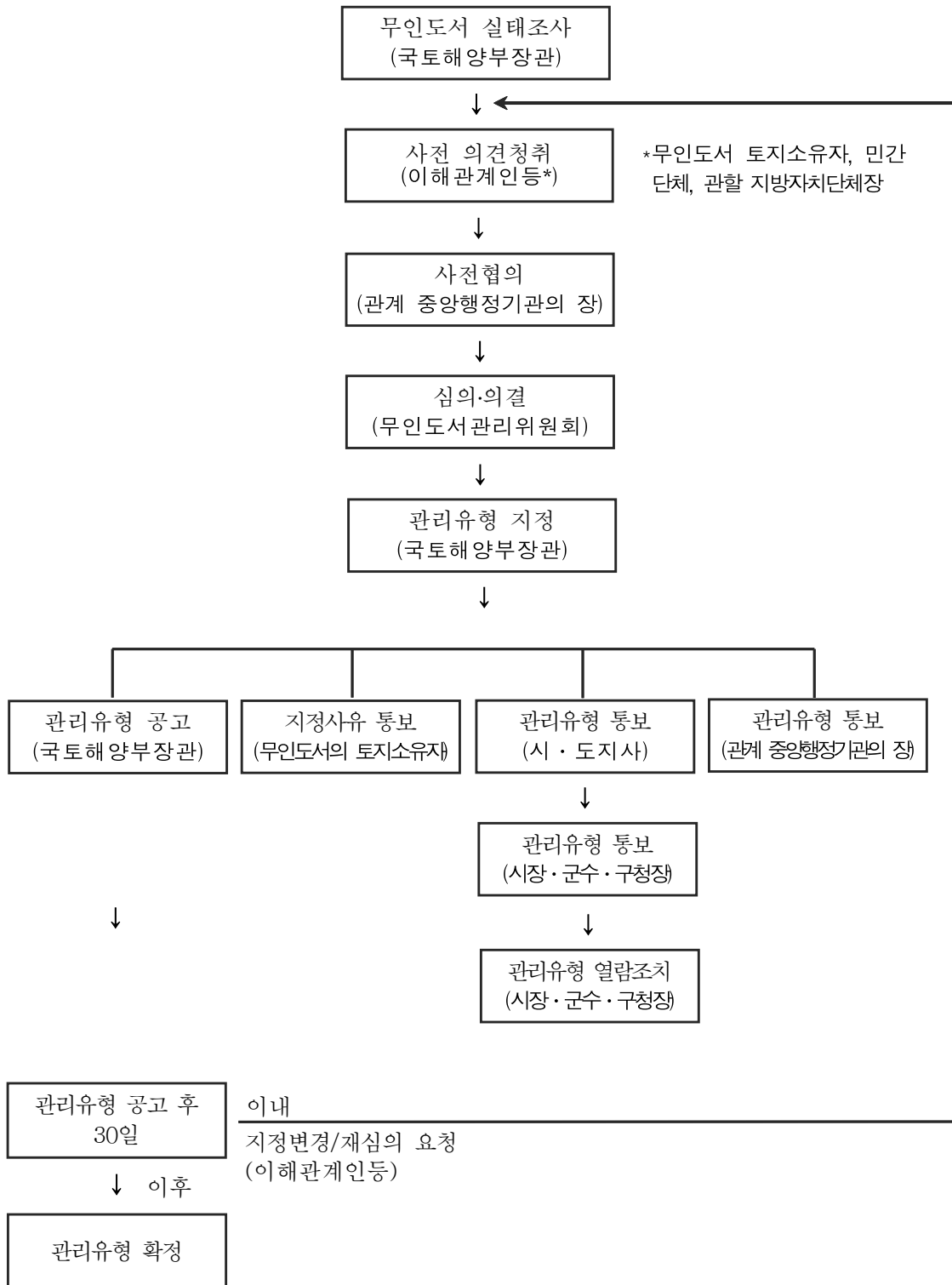
관리유형	정 의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
준 보 전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개발가능	절대보전·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 지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

- 관리유형 지정시 고려사항

- 무인도서의 위치, 면적 및 육지와와의 거리
-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생태계 및 해중경관의 실태
-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 무인도서의 시설물 및 이용현황
- 과거 주민거주 여부 및 향후 거주 가능성
- 무인도서의 토지 및 소유자 현황
- 제한적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 거주 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 영해설정과 관련한 무인도서의 의의
-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여부

- 관리유형 지정절차

<관리유형 지정 흐름도>



○ 관리유형 지정 계획

- 관리유형 지정 대상 무인도서는 전체 무인도서 2,876개 중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특정도서 166개를 제외한 2,710개 도서

- 실제 관리유형 지정은 실태조사 완료 무인도서에 대해 하는 것으로 2009.12월 현재 741개*인 이들 도서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에 지정
-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완료된 익년도 상반기에 지정을 추진하고, 미등록 무인도서는 지적공부 등록 후에 관리유형 지정

* 실태조사 완료 무인도서 수는 지적공부 등록 766개이나 이중 실태조사 완료 후 특정도서로 지정되었거나 특정도서를 대상으로 조사한 도서(25개)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등록된 무인도서(2,642개)의 86.41%(2,283개)에 대해 동법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 미지정은 13.59%(359개)

<등록도서 용도지정 현황>

구 분	합 계	용도지정	용도 미지정
도서수	2,642	2,283	359
비율(%)	100	86.41	13.59

- 용도지역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전체가 단일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98.34%(2,245개)이고, 복수용도는 1.66%(38개)임

<단일·복수 용도지역 지정 현황>

구 분	합 계	단일용도	복수용도
도서수	2,283	2,245	38
비율(%)	100	98.34	1.66
면적(km ²)	70.38	69.06	1.32
비율(%)	100	98.12	1.88

- 단일용도지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서 2,245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36.75%(825개), 관리지역 35.06%(787개), 농림지역 20.62%(463개), 도시지역 7.57%(170개) 순임
- 무인도서가 가장 많은 전남은 단일용도지역 지정 도서 1,428개 중 관리지역 39.71%(567개), 자연환경보전지역 37.39%(534개), 농림지역 18.63%(266개), 도시지역 4.27%(61개)의 순임

<단일용도지역 지정 현황>

구 분	합 계	도 시 지 역			관 리 지 역					농 립 지 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 계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 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미구분		
도서수	2,245	170	17	153	787	619	63	95	10	463	825
비율(%)	100	7.57	0.76	6.81	35.06	27.57	2.81	4.23	0.45	20.62	36.75
면적(km ²)	69.06	9.07	1.09	7.98	20.92	15.73	1.21	3.43	0.55	19.23	19.84
비율(%)	100	13.13	1.58	11.55	30.29	22.77	1.75	4.97	0.80	27.85	28.73

- 복수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무인도서는 38개이고, 이 중 36개(94.74%)는 2개 용도지역이, 나머지 2개 도서는 3개 용도지역이 지정. 지역별로는 전남 11개(28.95%), 경남 10개(26.32%), 충남 8개(21.05%)의 순임
- 복수지정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15개(39.47%) 도서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14개(36.84%) 도서임
- 용도지역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동법에 따라 용도지구가 지정된 도서는 12개(0.44km²)이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가 8개, 최고고도지구(고도지구)가 4개임
- 용도지역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동법에 따라 용도구역이 지정된 도서는 286개임(5.93km²)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이 97.20%인 278개 도서로 대부분을 차지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개, 개발제한구역은 6개 도서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도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전남이 149개 도서로 전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경남이 113개 도서(수산자원보호구역 108, 개발제한구역 5)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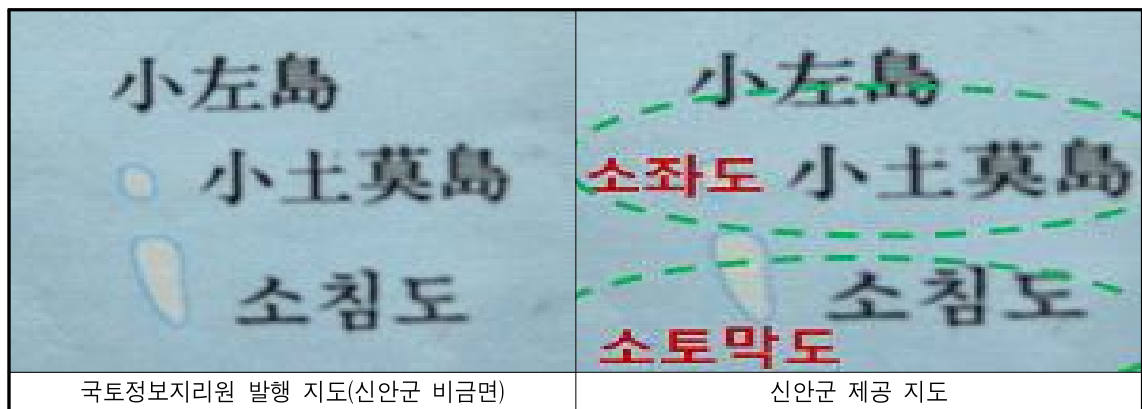
3. 무인도서 관리의 필요성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부족

- 무인도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이 거의 없는 공간적 특성에 따른 관심 부족으로 국토자원으로서 가치창출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고 부정확
- 무인도서 관리를 위한 정보는 지목유형, 토지이용 형태, 용도구분, 자연 및 생태계 현황 등이 있으나 통합·관리되는 기초데이터는 없는 상태
- 실태조사('07 ~ '09년) 결과 관련 기관간 보유자료의 도서명칭 상이, 미등록 도서의 존재, 등록도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등* 부정확 사례 확인

* 실태조사 사전준비시 입수한 자료에는 '치도'가 존재하였으나 실제 미존재

<관련기관 보유자료의 상이한 사례>



* 신안군 제공 지도에서는 '소토막도'를 '소좌도'로, 소침도를 '소토막도'로 표시

□ 외부간섭에 의한 생태계 등 훼손과 교란 심화

- 무인도서 주변 지역주민에 의한 염소 등 가축방목, 폐어망·폐어구 방치 등에 의해 생태계 훼손이 일상화
- 무분별한 골재채취, 식물·희귀식 무단채취, 쓰레기 투기, 해류에 의한 해양쓰레기 퇴적 등에 의해 자연경관 및 생태계 파괴 지속

- 육지부와 생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수중에서도 생태계 훼손과 교란 발생

<생태계 훼손 사례>



□ 보전과 이용·개발간의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 유지 필요

- 무인도서 체험 등을 포함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 증가로 무인도서 이용·개발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대
 - 최근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무인도서 활용 관광개발을 구상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개발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
- 사유 무인도서의 지나친 이용·개발 억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의 합리적인 조화 필요

□ 해양관할권 측면에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 UN해양법협약 체제에 따라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주권 확대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 우리나라는 중국·일본과 해양경계확정 협상 중에 있으므로 해양관할권 수호 및 확대를 위한 최전방 보루로서 특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
- 지구온난화 및 대규모 연안매립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영해기점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 요구

-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일반국민의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해양주권적 가치에 대한 인식 고양과 자발적인 관리 참여 유도 필요

□ 무인도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간참여 저조

- 육상 또는 유인도서 중심의 국토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 및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미흡한 실정
 - 무인도서가 갖는 생태적·경제적 가치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행정기관의 역량한계로 잠재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사회적 관심 저조
 - 무인도서의 잠재적 가치의 무한창출을 위해 행정기관의 역량 확대와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의 인식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시급한 상황

4.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 개발계획 현황

□ 2009.12월 현재 6개 시·도, 11개 시·군에서 28개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지역별로는 전남이 개발대상의 67.87%인 19개 도서로 가장 많으며, 강원 4개, 충남 2개, 경기·부산·경북이 각각 1개 도서임

□ 예산 조달형태로는 민관공동투자가 19개(67.86%), 민자유치 5개, 국비 또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4개 무인도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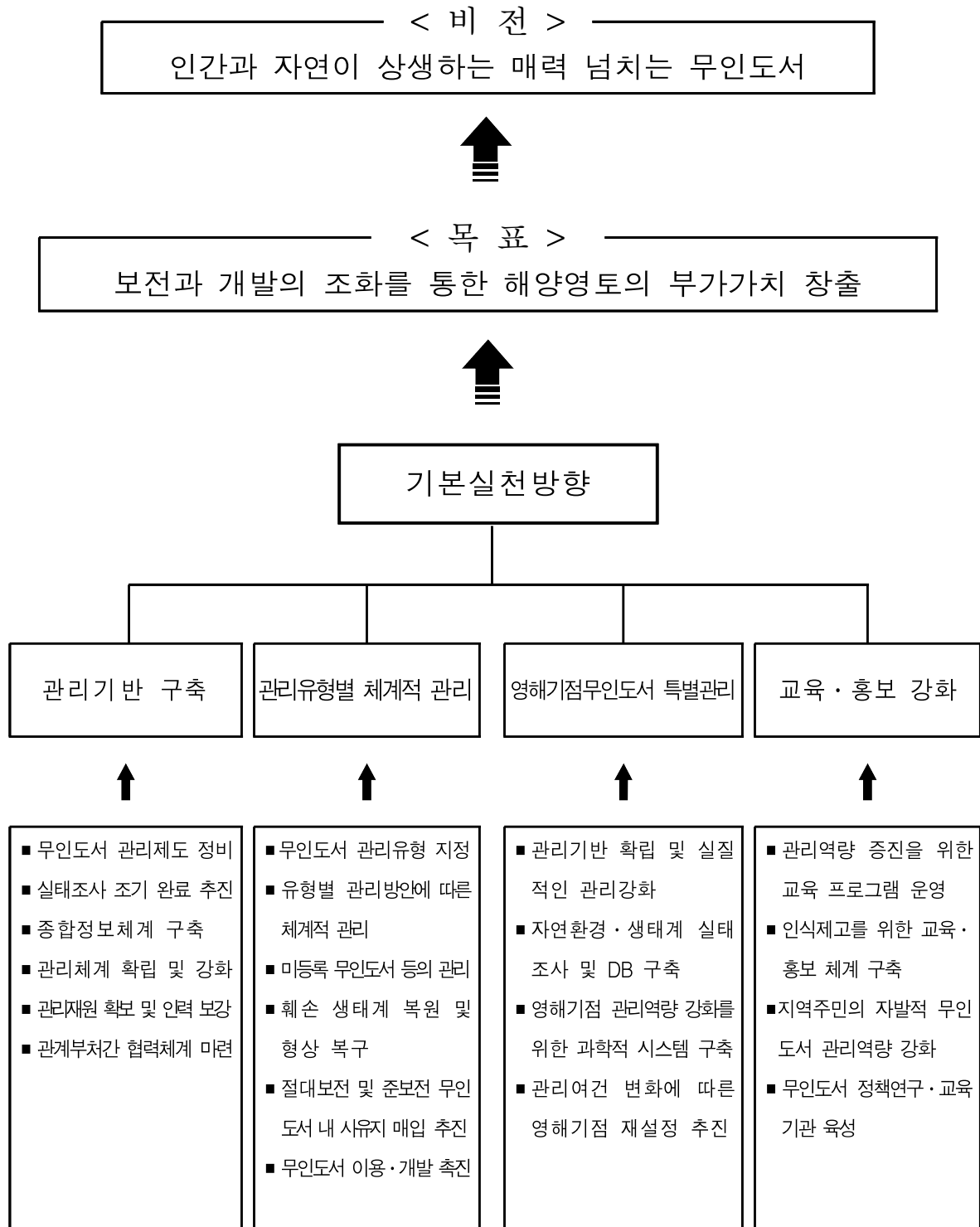
□ 무인도서 자체만을 개발대상으로 한 경우는 21개(75.00%), 육지와 연계한 경우가 6개 도서이며, 유인도서 연계는 1개 도서임

□ 내용으로는 생태공원이나 해안산책로 조성, 원시체험을 주제로 하거나 해중전망대 개발 외에도 골프장 조성 등이 포함

- 개발대상 무인도서가 육지로부터 1.0km 이내인 경우가 19개(67.86%)로 대부분이며, 가장 먼 경우는 명덕도로 육지에서 21.0km 위치
- 개발대상 도서의 평균면적은 약 0.14km²이며, 가장 넓은 무인도서는 신안군 안좌면 소재 상사치도로 약 0.88km²임

Ⅲ. 무인도서관리의 기본방향

1. 무인도서관리의 비전과 목표



2. 무인도서관리의 기본방향

☐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 무인도서 관리유형을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추진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관리인력 보강
-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무인도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계획적 점검·관리를 위해 연차별 무인도서점검계획을 수립·실시
-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무인도서 관리 정책 지원 및 대국민 제공을 위한 One-Click 종합정보체계 구축

☐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 관리유형 지정원칙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유형을 지정하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맞춤형 관리 강화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의 형상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예방적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훼손 도서에 대해서는 복원·복구 사업 시행
-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관리강화를 위해 사유 무인도서 매수 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내 사유지 매수 추진
- 이용가능도서는 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편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생태교육 등 탐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개발가능도서는 행정절차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되, 무인도서 기능 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관리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관리 체계의 명확화와 계획에 입각한 점검 및 관리를 통한 해양관할권 강화기반 구축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의 자연환경·생태계 훼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획득 자료의 DB화 구축
- 영해기점표의 관리역량을 증진하고 영해기점 소재 해안 저조선의 장기적 변화 관측을 위한 과학인프라 구축
- 내륙화된 직선기점 및 형상이 훼손된 일부 도서의 직선기점 재설정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 검토 추진

☐ 교육·홍보 강화

- 무인도서 관리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이용자의 무인도서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지역주민의 자발적 무인도서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확대를 통해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무인도서 관리체계 확립
- 무인도서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민간부분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무인도서 정책연구·교육기관의 지원 및 육성

3. 단계별 추진계획

☐ 무인도서 관리체계 기반 조성 : 제1단계('10 ~ '13년)

- 실질적인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등 제도 개선
-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 조기 완료
-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대국민 홍보 집중 실시
- 무인도서 관리인력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관리체계 확립·실천 : 제2단계('14 ~ '17년)

- 무인도서 관리인력의 전문성 지속 확보

- 무인도서 관리 거버넌스 강화로 지역·주민 밀착형 관리체계 확립
- 이용프로그램 등의 개발 등을 통해 무인도서의 부가가치 지속 창출
- 사유 무인도서 매입 등 각종 시책의 차질 없는 시행

□ 선진적인 무인도서 관리 위상 확립 : 제3단계('18 ~ '19년)

- 무인도서에 대한 조화로운 보전 및 이용·개발로 해양영토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본 토대 정착
-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무인도서 관리 성과 홍보 및 개발도상국 무인도서 관리 지원 등 선진 무인도서 관리기법과 성과의 국제적 공유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 분	목 표	주요 추진내용
1단계 : 기반 조성기 ('10 ~ '13년)	무인도서 관리체계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제도 개선 ◦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 ◦ 종합정보체계 구축
2단계 : 구체적 실현기 ('14 ~ '17년)	지역밀착형 관리체계 구축과 친환경적 이용·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역량 강화 ◦ 지역·국민 관리협력체계 마련 ◦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3단계 : 체계적 완성기 ('18 ~ '19년)	국토자원 우수 관리모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해양영토 관리 토대 정착 ◦ 선진 무인도서 관리기법 및 성과의 국제적 공유

IV. 분야별 추진계획

1.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 중점 추진과제 >

- 1-1 무인도서 관리제도 정비
- 1-2 실태조사 조기 완료 추진
- 1-3 종합정보체계 구축
- 1-4 관리체계 확립 및 강화
- 1-5 무인도서 관리재원 확보 및 인력 보강
- 1-6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마련

1-1

무인도서 관리 제도 정비

가. 현황 및 문제점

☐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를 '보전무인도서'로 통합 필요

-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경우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생태적·경관적 가치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한 국민의 접근에 한계
-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는 행위제한의 내용이 동일하고, 상시적 출입 허용 여부에만 차이가 있어 정책상 구분의 실익이 거의 없음
- 또한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서 각각의 지정요건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적용상에 어려움 존재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능동적 관리 취약

-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의 개발계획 승인·취소권만 있고 절대보전·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수단이 없는 상태

<개발규모별 승인권자>

개 발 계 획 규 모	승인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5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는 경우 	개발계획 승인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수용적정한계를 넘는 이용에 대한 관리수단 미흡

-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한 지속적·환경친화적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관리수단이 없어 무인도서 본래의 기능 유지에 한계

☐ 무인도서관리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 건축물 건축, 토석채취, 가축방목·토착생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 유인정책 필요

나. 추진방향

☐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검토를 통한 관리유형의 종류 조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 관리 기능 강화

☐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위법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도입

다. 추진계획

☐ 무인도서 관리유형 종류의 재구분 추진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4개 관리유형을 보전·이용가능 및 개발가능의 3개 유형으로 재설정하는 방안 추진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를 보전무인도서로 통합하는 경우 탐방·체험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해 출입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 관리유형 지정 현황, 집행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법 개정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추진 : '12 ~ '13년]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할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개발가능도서 외에도 절대보전·준보전 및 이용가능도서에 대한 일정 범위 내에 관리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지방해양항만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관계 재정립, 관리유형 지정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기적으로 업무범위 재조정 검토 추진
- 이와 함께 종합관리계획의 세부시행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하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2 ~ '13년]

□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수단 보완

- 적정수용능력을 넘는 과도한 이용에 따른 생태계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자연휴식년제, 일시사용 통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또는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형상 훼손, 벌목, 야생동·식물의 밀반출 등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 도입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2 ~ '13년]

1-2

실태조사 조기 완료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실태조사 장기화에 따른 관리유형 지정 지연

- 실태조사 대상도서 2,710개(특정도서 166개 제외) 중 2009. 12월 현재 741개(27.34%) 도서가 완료되어 향후 1,969개 도서 추가 조사 필요
- 실태조사의 장기화에 따라 관리유형 지정 지연
 - 관리유형에 따른 체계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관리에 한계 노정
 - 무인도서관리법 시행('08. 2. 4) 당시 개발계획의 인·허가가 없는 무인도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다수 민원 제기 가능성 상존

☐ 무인도서에 관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지연

- 무인도서정책에 관한 기초자료의 체계적인 축적·관리와 실태조사 미완료 도서에 관한 정보의 대국민 제공이 지연
 -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정책 및 수단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포함한 지역의 인문사회에 관한 실태자료의 조속한 축적이 필요
 - 해양을 즐기고 다양하게 체험하려는 인구의 저변확대로 무인도서 관련 살아 있는 정보를 원하는 수요자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 곤란

나. 추진방향

- ☐ 실태조사 미완료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조기 완료 추진
-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자료는 실태조사에 이용

다. 추진계획

- ☐ 예산 조기 확보를 통한 실태조사 조속 완료 및 사유 무인도서 우선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의 조기 확보로 모든 도서의 육지부에 대한 조사가 늦어도 2012년까지 종결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0 ~ '13년]

- 사유지가 포함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보다 먼저 추진함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국립해양조사원 / 연도 : '10 ~ '11년]

<실태조사 연도별 추진 예산>

구 분		조사대상	조사완료	연도별 추진계획				
				계	'10년	'11년	'12년	'13
육 지 부	개 수	2,710	741	1,969	645	662	662	-
	예산(백만원)	8,636	2,000	6,636	1,768	2,318	2,550	-
주변해역	개 수	366	92	274	47	69	79	79
	예산(백만원)	2,001	500	1,501	205	345	453	498
예산합계(백만원)		10,637	2,500	8,136	1,973	2,663	3,003	498

□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및 보유 자료 적극 활용

-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등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추진 방안 강구
 - 조사대상 무인도서 선정 · 조사 시기 · 항목 · 방법 · 인원 및 예산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중복조사 및 행정낭비 최소화
 - 통제보호구역 지정 또는 문화재 소재 무인도서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계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실태조사의 효율성 제고

-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를 통해 환경부가 기 보유한 개별 무인도서의 자연경관, 식물 · 식생 등 자료를 무인도서 실태조사에 활용

[총괄 · 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환경부 · 국방부 · 문화재청 / 기간 : '11 ~ '13년]

1-3

종합정보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정책 업무지원을 위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부재

- 지금까지 무인도서 관련 정보는 도서명칭, 위치 등 일부 항목에 국한하여 단편적·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 무인도서 정보는 연안통합관리 정책의사결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연안포털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도서 수와 항목은 극히 제한적
 - 또한 무인도서 실태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관리유형 지정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이해상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B 구축 필요

☐ 무인도서관리 행정기관간 자료 공유체계가 없는 상황

- 행정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무인도서 자료의 통합시스템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 특정도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인도서 위주의 관리로 국가차원에서 무인도서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마련 필요

☐ 대국민 무인도서 정보제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필요

- 해양관광 등 국민의 무인도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도서 공간, 인문사회, 자연경관 및 생태계 정보제공 시스템 부재
- 무인도서 정책과 가치 및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민의 정책제안 등의 공간제공을 위한 쌍방향 의사교류 창구 마련

나. 추진방향

☐ 무인도서 관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DB화

☐ 무인도서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다. 추진계획

☐ 무인도서 실태조사 결과 자료의 DB 구축 및 지속적인 이력관리

- 무인도서의 생태 및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실태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의 DB화를 통해 정책결정 및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무인도서의 보전과 이용·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정책결정 및 관리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하게 DB항목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설계
- 정기(10년 주기) 및 수시(필요시) 실태조사 결과자료의 보존과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또한 환경부와 협의하여 DB구축 대상에 특정도서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 무인도서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환경부 / 기간 : '10 ~ '12년]

<DB 구축 항목>

구 분		구 축 항 목
무인도서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도서 정책자료, 관련 법령 및 Q&A ◦ 무인도서 통계(소유형태별, 지목유형별, 면적별, 지자체별)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현황, 일시적 출입제한 준보전 무인도서 안내 ◦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한 무인도서 분포 상황 ◦ 특정도서 현황, 주요 외국의 무인도서 정책, 주변국의 직선기점 위치도 ◦ 지방해양항만청 등 무인도서 관리 행정기관별 사이트
개 별 무 인 도 서	일반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무인도서의 인공위성 영상, 해도, 도서전경, 좌표, 행정구역, 면적 ◦ 토지소유현황, 유인도서 및 육지와와의 거리
	관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유형, 용도구분, 지목, 다른 법령에 의한 관리현황 ◦ 영해기점무인도서 여부, 개발계획 현황
	인문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민의 거주여부, 향후 거주가능성, 사람 거주시 거주목적 ◦ 도서 및 주변해역 이용현황, 역사적 가치 등 기타사항
	자연환경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경관, 식생·식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 육상동물, 해안무척추동물, 해조류 ◦ 주변해역 해중경관을 포함한 관련 디지털 이미지, 동영상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무인도서와 연계 가능한 주변 육지 및 유인도서의 관광자원 ◦ 주요 도시에서의 접근 경로·거리, 교통수단별 소요시간 ◦ 날씨, 파고 등의 기상 정보와 여객선 통제 상황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해양경찰서 등 주요 행정기관 전화번호

□ 이용자들이 One-Click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마련

- 무인도서 정책, 자연경관, 생태계, 관리유형, 접근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망라·제공하는 종합적인 홈페이지 구축·운영

- 환경부,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접근 경로의 제공 및 활용도 증진 도모
 - 무인도서 홍보기반 구축,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인접지역의 해양관광 문화정보도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
-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환경부·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연도 : '13년]

□ 독립 Web 기반의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구축 추진

- 단기적으로는 연안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결과자료의 DB화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독립 시스템 구축
 - 정책결정의 신속성 도모, 과학적 관리 및 특화된 정보제공을 위해 관리 유형 지정이 완료되는 2013년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
 - 다만, 종합정보체계 설계 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 중인 도서정보 시스템 DB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성 도모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국토지리정보원 / 연도 : '13년]
-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 자료의 현행성 유지 및 대국민 요구자료 제공 등을 위해 가칭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운영 및 관리지침' 마련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3년]
- 종합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관리 인력 증원 확보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행정안전부 / 연도 : '12년]

1-4

관리체계 확립 및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무인도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무인도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합리적인 역할 분담 요구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밀착형 관리체계의 확립
 - 외부간섭에 의한 생태계 훼손 등을 방지하고 무인도서 가치에 대한 인식고양을 위해 보전·관리에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 필요

나. 추진방향

- 무인도서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역할 분담
-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다. 추진계획

- 무인도서 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국토해양부 : 정책 총괄, 재원 확충, 개발도서 예산지원, 홍보·교육 등
 - 지방해양항만청 : 무인도서 점검·관리, 절대보전도서 출입허가 등
 - 국립해양조사원 : 영해기점표 설치·관리 및 훼손·망실된 점표의 복원 등
 - 해양경찰청 :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 및 지도·단속 등
 - 지방자치단체 : 개발도서 예산지원, 개발계획 승인·취소 등
 - 주민·시민단체 : 관리활동에 참여, 대안 제시 및 모니터링 등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관리주체별 무인도서 관리매뉴얼 마련
 - 무인도서 관리업무가 유기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관리주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관리매뉴얼 마련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년]

□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무인도서 관리체계 정립

- 무인도서 관리정책의 입안, 집행 및 모니터링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합의와 협조하에 추진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무인도서 관리시책의 민주성 및 실천력 확보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보호 활동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

[총괄 · 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인근 지역의 주민, 어촌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적극 활용
 - 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 계도, 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 등 명예관리원 활용에 의한 무인도서 관리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1 ~ '19년]

1-5 관리재원 확보 및 인력 보강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 관리 ·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재원이 전무한 상태

- 무인도서 관리, 훼손된 도서의 형상 · 생태계 복원, 해양쓰레기 수거 등 기본적인 무인도서 관리 필요 재원이 전혀 없는 실정
 - 무인도서 보전 및 훼손 무인도서의 복원 등을 위한 중장기 사업은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

□ 신규 발생된 무인도서 관리업무를 위한 인력의 절대 부족

- 관리유형 지정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

- 무인도서 관리업무 인력은 해양환경, 공유수면 관리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도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또한 무인도서의 숫자가 매우 많고 지리적으로도 산재되어 있어 관리·감독하여야 할 범위가 넓어 적정관리 인력 확보 절대 필요

<지방해양항만청 무인도서 관리인력 현황, '09.12 현재>

구 분	합 계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울산청	대산청
인 원	15	2	1	1	2	1	1	1	2	1	2	1
도서수	2,710*	98	90	470	445	34	68	1,209	40	36	3	217

* 2,710개는 전체 무인도서 2,876개 중 특정도서 166개를 제외한 수치

나. 추진방향

- ☐ 무인도서 관리에 투자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 무인도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인력 확충

다. 추진계획

- ☐ 주기적인 점검 등 무인도서 관리 예산의 지속적인 확충 추진
 -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이 완료('13년)되어야 동 계획기간 중 전체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나
 - 향후 투자계획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리업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추진
-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관리유형에 따라 국고지원, 지방비 및 민자유치 등 재원 조달방식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
 - 자연경관, 우수 생태계 등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국민

신탁(National Trust)운동 등을 통해 자발적인 민간참여 유도

- 해양관광 활성화 또는 공공성이 강한 무인도서의 개발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 보조를 통해 도로·항만시설 등 인프라 구축 설치 지원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 관계 : 기획재정부 / 기간 : '11 ~ '19년]

□ 무인도서 관리인력 보강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의 인력 보강

- 무인도서 수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해양항만청별로 6급 이하 전담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제 개정시 반영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무인도서 수를 고려 적정 인력의 확보를 추진하되, 무인도서가 집중되어 있는 경남·전남 등 지역을 우선 고려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행정안전부 / 협조 : 지방자치단체 / 연도 : '11년]

1-6

관계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 관리 이원화로 일부 무인도서에 대한 중복 조사 발생

- 환경부의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와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실태조사 항목간 중복 발생과 조사자료의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
- 환경부는 지형경관·식생·식물·대형동물·해안무척추동물·해조류 및 곤충 등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 국토해양부는 그밖에도 무인도서의 역사적 가치, 과거 주민거주 여부, 개발계획, 영해설정과 관련된 의의, 타법에 따른 관리대상 여부, 주변해역 이용실태 등 인문사회환경과 해중경관 실태 및 해저지형에 대해서도 조사

- 환경부는 '09.12월 현재,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876개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지형경관 · 식생 · 식물 및 육상동물 등)조사를 하였고, '14년까지 285개를 추가 조사할 계획
- 환경부 수립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 ~ '15년)에서도 무인도서 자연환경 조사시 관계 부처와 합동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체계 구축할 것을 제시

□ 무인도서 통합관리의 비효율성 발생 우려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주변해역은 무인도서관리법이 적용되어 특정도서 육지부와 주변 해역의 관리주체가 상이
- 타법에 따른 보호구역 등이 지정된 무인도서를 개발가능으로, 개발 가능으로 지정된 무인도서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갈등과 혼선 발생 우려

나. 추진방향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갈등 사전 예방

□ 부처간 공동사업 및 협업적 무인도서 관리를 통해 관리능력 확대

다. 추진계획

□ '무인도서 관리 협의회' 설치를 통한 협력체계 활성화

- 부처별 무인도서업무 담당자들간의 정기적인 무인도서 관리 현황 점검,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상충관계 해소 방안 모색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기획재정부·환경부·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국토지리정보원·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연도 : '11년]

□ 무인도서 관련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행정기관별 달리 관리되는 무인도서 전문가 Pool의 공유화 추진을

통해 전문가의 질적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환경부 / 연도 : '11년]

○ 무인도서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추진

- 무인도서 지도(위치도, 안내도 및 주제도 등) 제작 및 학술세미나·사진전 개최, 무인도서 책자 발간, 영상홍보물 제작 등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행정안전부·환경부 / 연도 : '14]

2.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 중점 추진과제 >

- 2-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 2-2 유형별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 2-3 미등록 무인도서 등의 관리
- 2-4 훼손 생태계 복원 및 형상 복구
- 2-5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2-6 무인도서 이용·개발 촉진

2-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유형 지정원칙 및 무인도서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유형 지정 필요

- 절대보전·준보전 또는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불만 표출 가능성 상존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유형 지정 원칙 마련 및 적용이 필수적

☐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중요

- 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무인도서에 대해 개발가능 외의 관리

유형이 지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가능성 존재

- 또한 개발가능도서로 지정되는 경우 자연환경·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환경단체의 반발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상충으로 갈등 표출

나. 추진방향

- ☐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
- ☐ 무인도서의 정확한 실정이 반영된 관리유형의 지정
-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추진

다. 추진계획

- ☐ 합리적인 관리유형 지정 기본지침 수립
 - 관리유형 지정을 위한 우선순위 및 관리유형별 지정 세부원칙 검토
 - 우선순위와 세부원칙을 고려한 관리유형 지정 기본지침 마련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0년〕
- ☐ 무인도서의 정확한 실정이 반영된 관리유형 지정
 -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관리유형 지정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을 지정하고, 상충방지를 위해 타법에 따른 관리현황도 충분히 검토
 - 무인도서의 면적·위치 및 생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 무인도서에 대해 복수의 관리유형 지정 추진
 - 또한 2개 이상의 무인도서가 밀집되어 있고 그 동질성 등으로 인하여 통일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동일한 관리유형 지정방안도 검토
 - 관리유형 지정·변경에 이의제기가 있는 도서는 토지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를 통해 관리유형 재지정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1 ~ '13년]

- 2009년말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무인도서(741개)에 대해서는 2010. 6월말까지 관리유형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적극 추진

- 무인도서 관리시책의 민주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인도서관리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간담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폭넓게 수렴, 지역내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관리수행 기반조성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3년]

2-2

유형별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 지정 목적에 따른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무인도서는 환해성·격절성 및 협소성이라는 특성으로 형상이나 생태계가 일단 훼손이 되면 원래 상태로의 회복이 매우 곤란

□ 공동유산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리 요구

- 무인도서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함께 향유할 공동유산으로서 보전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국토자원의 하나

나. 추진방향

□ 관리유형별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관리 강화

다. 추진계획

□ 절대보전무인도서의 기본관리 방안

< 관리방안의 목적 >

절대보전무인도서는 형상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 추진

○ 사전적·예방적 무인도서 점검·관리

- 무인도서 가치, 법정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위·출입제한 안내판 설치를 통해 사전적·예방적 관리 강화
- 특히 주변지역 주민이나 낚시객에 대한 홍보나 지도 활동 적극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 협조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점검기관의 정기(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지도·감시기능 강화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자연경관·생태계에 대해 격년별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자연경관 등이 훼손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원조치를 강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리유형 재지정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연도 : '14·'16·'18년]

○ 주민 및 지역밀착형 보전·관리체계 정립

- 무인도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보호 및 관리활동 참여 유도
- 무인도서 인근지역의 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전 및 관리 강화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9년]

○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에 따른 세부 관리방안 마련

- 행위제한 유형별은 물론 예외적·제한적 허용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리 주체 및 관리수단 마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 출입제한의 예외가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도서의 형상 및 자연생태계가 보전·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교육 실시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9년]

□ 준보전 무인도서의 기본관리 방안

< 관리방안의 목적 >

준보전무인도서는 형상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행위제한의 사전관리를 엄격히 추진하고 출입제한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

- 행위제한 관리는 절대보전도서의 예에 따르되, 출입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고려하여 출입자의 행위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
 - 농사·어로행위 등 생계수단 확보를 위한 출입자와 일반 출입자를 구분하여 출입자별 행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과 처벌에 대한 홍보 실시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통한 관리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가 부당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면적과 기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이나 이용객의 출입을 최대한 보장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9년]

 - 지역주민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하고, 관보·인터넷·안내판 등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로 예방적 관리 추진
 -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제한 지역의 위치·면적, 기간·사유 등을 통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행 공보에 게재·홍보하는 등 협력 강화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관계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자연경관·생태계에 대해 격년별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자연경관 등이 훼손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복원조치를 강구하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관리유형 재지정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 · 지방해양항만청 / 연도 : '14 · '16 · '18년]

□ 이용가능무인도서의 기본관리 방안

< 관리방안의 목적 >

이용가능무인도서는 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양레저활동, 무인도서 탐방, 생태교육, 공유수면의 일시적인 점·사용 등 허용행위를 최대한 촉진

○ 해양레저활동 및 탐방·생태체험 등 활성화 촉진

- 형상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무인도서 이용가이드' 책자 발간·보급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0 ~ '11년]

- 무인도서별 특성에 따른 최적 이용을 위해 허용행위별 무인도서의 그룹핑을 실시하고 종합정보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 탐방·생태교육 전문기관 육성을 통해 무인도서 이용 내실화 촉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연도 : '15년]

○ 지방해양항만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형상 보존 범위내에서 허용행위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지원

- 해양레저활동, 무인도서 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설 설치를 하려는 경우 합리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고지원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2 ~ '19년]

○ 맞춤형 관리를 위해 이용행위 종류별 세부관리방안 마련

- 다양한 유형의 이용행위별 특성과 그 행위에 따른 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허용행위별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리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1년]

□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기본관리 방안

< 관리방안의 목적 >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휴식공간으로서의 무인도서 가치 창출의 극대화 추진

○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리

- 개발계획 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함으로써 관계 기관간의 불필요한 상충방지 및 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 도모
- 개발유형별 합리적인 개발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승인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발과 보존 가치의 조화 추구
- 개발행위는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타당성·순응성을 제고
- 승인 또는 추진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위치, 승인의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DB을 구축하여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 관리
- 개발로 인한 인접 구역 및 주변해역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친환경적 개발 유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행정기관의 승인이 불필요한 일정규모 이하의 도서관리

- 체계적인 관리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사후 신고제를 도입 하고, 제도 마련시까지 교육·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사전신고를 유도
- 불법적인 개발행위, 기존 개발시설물의 확대 여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무인도서관리 강화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개발완료 무인도서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개발이 허용된 면적을 포함한 일정지역 밖의 구역 및 주변해역에 대해서는 훼손 및 주변해역의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개발 완료 무인도서의 경우에도 개발지역 밖의 구역에 대한 보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구역에 대해서 추가 관리유형 지정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가. 현황 및 문제점

☐ 지적공부 미등록 무인도서 관리 필요

-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없거나 지적공부에는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인도서가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급

<미등록 무인도서 현황>

합 계	지자체 통보 미등록 도서	국토해양부 실태조사시 발견			
		소계	'07	'08	'09
234개	104개	130개	24개	48개	58개

- 신규 발견된 미등록 무인도서의 경우 공식적인 도서 명칭이 없는 상태로 지역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된 도서 명칭 부여 필요

☐ 지적공부 등록 무인도서도 관련 자료가 부정확한 상황

- 일부 등록 무인도서는 공부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상이하고, 해안선 길이 자료가 없어 무인도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제공에 한계
- 또한 지도에 표기된 무인도서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자료 관리의 혼선과 정보제공에 혼란 가중이 발생할 우려

나. 추진방향

☐ 미등록 무인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무인도서 실 위치 등 지적공부 등록 무인도서의 부정확한 자료 보정

다. 추진계획

□ 지적공부 미등록 무인도서의 지적공부 등록 및 명칭 부여 추진

- 실태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발견된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국유화 및 지적공부 등록 실시
 - 최소 6개월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과 관보·일간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한 공고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의 소명기회 충분히 보장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 ~ '17년]
- 신규 발견 무인도서에 대한 공식 명칭 부여를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강화
 - 각급 지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인도서 명칭 부여 조속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국토지리정보원·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 ~ '13년]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무인도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말소 추진
 - 지적공부 등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의 선의의 피해 방지 및 정확한 도서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존재 도서에 대해서는 정리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 ~ '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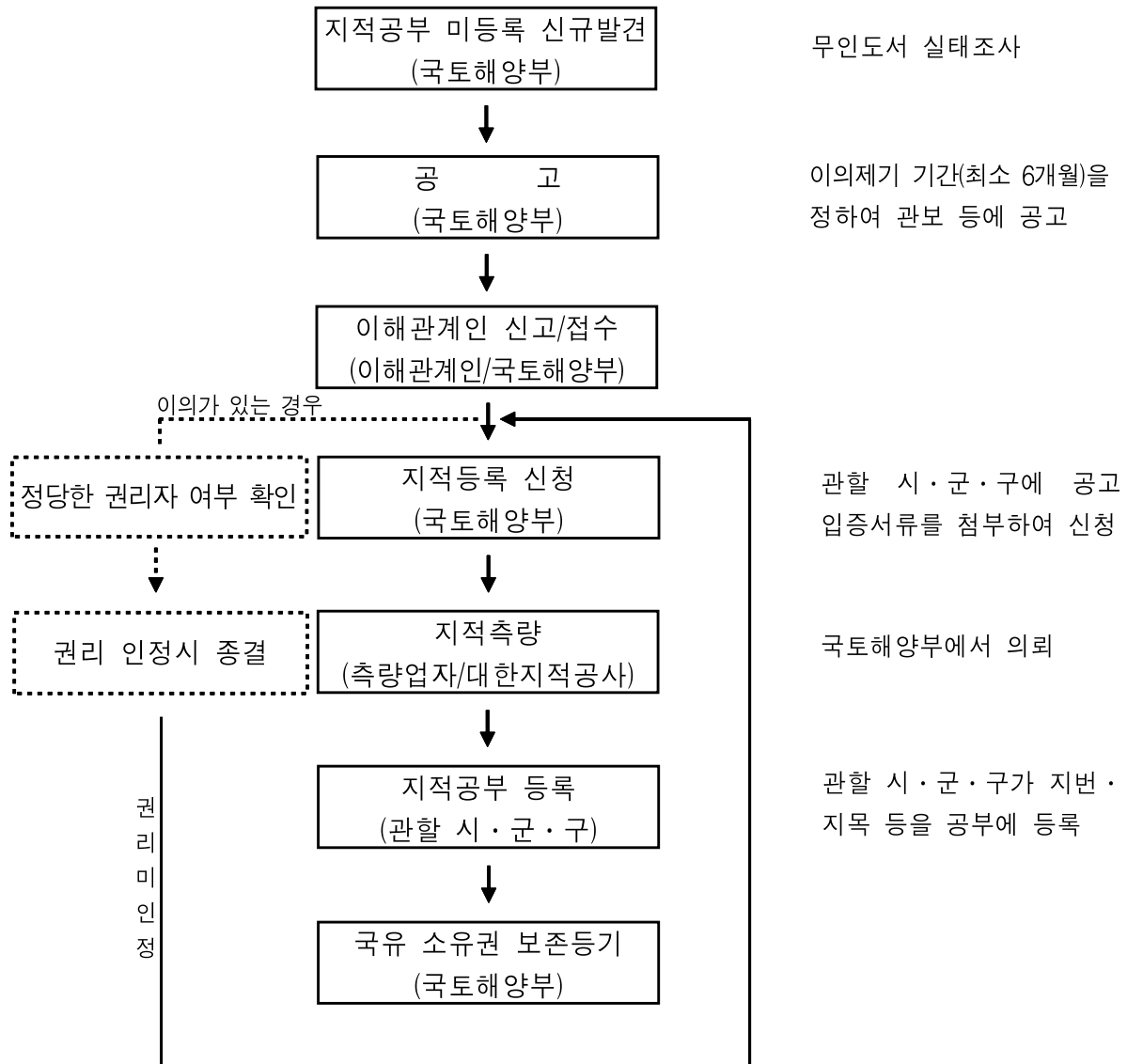
□ 실태조사 결과와 상이한 등록 무인도서의 자료 정정 추진

-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 실태조사 항목의 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지적공부와 상이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DB로 구축·관리
 - 실제 정보가 지적공부와 다른 무인도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이한 정보는 현실에 맞도록 수정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3년]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무인도서 관련 위성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협조를 통해 도서의 위치 정정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국토지리정보원·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 ~ '13년]
- 무인도서의 정확한 형상과 해안선 길이에 대한 체계적 자료 축적을 위해 무인도서별 해안선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해도 전면 개정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2 ~ '18년]

<해안선 정밀조사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12	'13	'14	'15	'16	'17	'18	'19
예 산 (백만원)	19,680	3,300	3,630	3,617	3,862	2,544	1,345	562	820

<신규 발견 무인도서의 국유화 절차>



2-4

훼손 생태계 복원 및 형상 복구

가. 현황 및 문제점

☐ 인위적인 외부간섭에 의한 무인도서의 생태계 훼손 심화

- 지역주민에 의한 염소·토끼 등 가축방목, 폐어망·폐어구 등의 방치에 의해 생태계 훼손
- 낚시객 출입에 의한 낚추·낚시줄·낚시대 등 낚시장비와 그 밖의 생활쓰레기 투기에 의해 주변해역을 포함한 생태계의 훼손 심각
- 육상 등으로부터 밀려온 스티로폼·PET병 등 다량의 쓰레기가 무인도서 해안에 밀려와 그대로 방치

☐ 영해기점무인도서 형상의 훼손 등의 경우 보전조치 필요

-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무인도서의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형상 복구 및 추가적인 훼손 방지 필요
 - 방파제 건설, 사격장으로 활용 등 인위적인 훼손과 함께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해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추가적으로 훼손이 진행 중

나. 추진방향

☐ 무인도서 실태자료 DB구축을 통한 복원 및 복구 기반 마련

☐ 훼손된 생태계의 자연성 회복과 추가적인 훼손 방지

다. 추진계획

☐ 생태계·형상 훼손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DB 구축 추진

-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도서별 생태계 및 형상의 훼손 유형과 원인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0 ~ '13년]

- DB화된 자료는 훼손 방지 및 복원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연간 무인도서점검계획에 반영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 ·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별 관리유형에 따른 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는 가축방목, 낚시객 입도,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적 교육 · 홍보를 통해 훼손 최소화
- 이용가능도서는 탐방 등 이용과정에서 생태계 등을 훼손치 않도록 하고 발생한 쓰레기는 자진 수거토록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
- 개발가능도서는 개발업자의 생태계 및 형상 보전을 위한 자체 관리 및 복원 · 복구 방안을 마련 · 시행토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철저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 · 지방해양항만청 ·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생태계 및 형상 훼손 유형에 따른 복원 · 복구 시행

- 멸종위기종 · 한국 고유종 및 우수한 지형 · 지질 등이 훼손된 경우 정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가급적 원형대로 복원 · 복구 사업 추진
 - 환경부 · 산림청 · 공공단체 등과 협조하여 생태적 복원기술의 개발 및 복원사업에 대한 관리 · 감독 등 훼손 생태계 복원을 적극 시행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관계 : 환경부 · 산림청 / 기간 : '11 ~ '19년]

□ 영해기점무인도서 등의 형상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복원 시행

-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태풍 ·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 · 멸실 등의 확인을 위한 연 1회 정기점검 실시
-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유실 · 붕괴 등 2차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모니터링 및 교육 · 홍보를 통해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전적 활동 강화

- 지방해양항만청 ·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경찰청 등 관리주체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예방적 멸실·훼손 방지 강화

- 훼손의 폐해 또는 복원의 중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무인도서의 보호를 위한 국민인식 제고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2-5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관리유형이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는 개발행위가 제한

- 특정도서 면적(10.22km²)을 제외한 무인도서 면적 66.25km² 중 사유지는 41.29km²로 이중 절대 또는 준보전으로 지정될 예상면적은 약 3.20km²*

* 관리유형 지정이 완료될 '13년이 되어야 실제 사유지 면적을 알 수 있으나 실태 조사용역기관이 제안한 절대 또는 준보전 내 사유지면적을 토대로 산출(약 7.75%)

- 개인 소유의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다수 민원제기 가능성 존재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는 국가차원에서도 보존이 필요

- 자연경관 또는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영해설정과 관련된 무인도서는 미래세대와 국익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가 필수적

나. 추진방향

- 합리적인 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 토지매수의 투명성 제고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내 사유지는 협의를 통해 매입

다. 추진계획

□ 매수대상지 기준 및 우선순위 원칙 마련

<매수 대상사유지 기준 및 범위>

- 전체가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인 경우 전체에 대해,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위치·면적·지목 등에 관계 없이 매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한 매수는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토지의 전부, 민간 소유자 청구에 의한 매수는 원칙적으로 전부 매수
- 타법에 의해 보호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어 이용·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거나 저당권의 설정 등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이 제한되는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

<매수우선 순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보전 목적으로 매수하는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 내 사유지
-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로서 매수청구 요건 및 자격을 갖춘 사유자의 청구가 있는 토지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3년]

□ 토지매수 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 매수 추진

- 국가 등이 보전을 위한 필요에 의해 매수하는 사유지는 관리유형의 지정이 완료되는 2014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매수
 - 매수대상이 될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를 파악하고, 동 계획에 선정기준·방법, 매수기간, 구체적인 절차 등을 포함
 - 또한 무분별한 매수 방지를 위해 정밀조사,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추진
- 민간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대상 토지별 매수 5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매수
- 매수한 토지는 이용가능 또는 개발가능 무인도서로 관리유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매수목적과 유형별 관리방안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4 ~ '19년]

<사유지 매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14	'15	'16	'17	'18	'19
면 적(㎡)	3,20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50,000
예산(백만원)	4,470	740	740	740	740	740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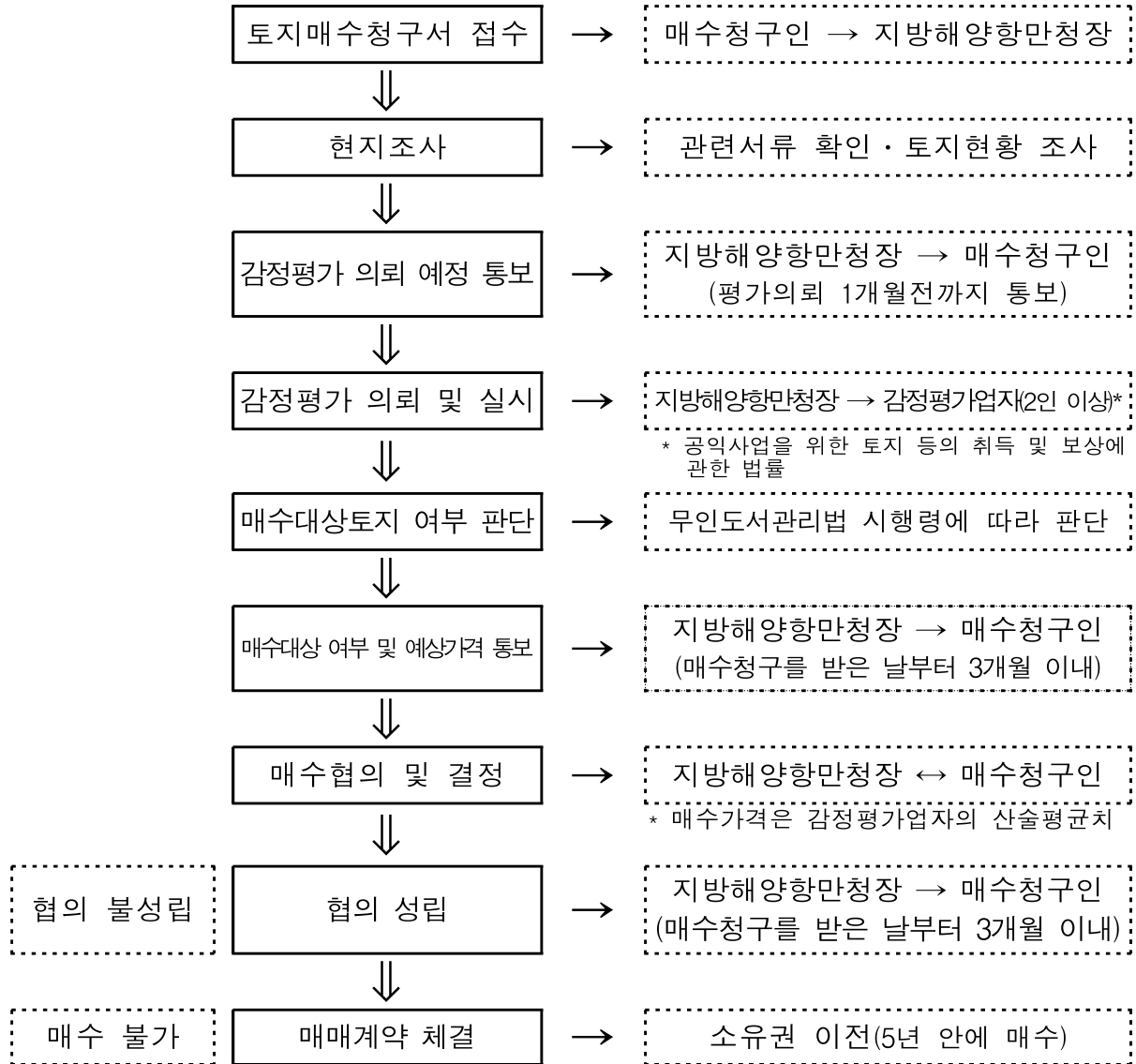
* 임야기준으로 1㎡ 당 공시지가 1,397원 적용하여 산출

□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한 소유자의 권익 보호

-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 지정 당시부터 계속 소유 또는 상속하고 있는 토지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소유자 권리보장
- 토지매수 계획을 토지소유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개별 통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매수
 - 국가 등이 필요에 의해 매입을 추진하는 사유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어 매입에 따른 문제 최소화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4 ~ '19년]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절차>



2-6

무인도서 이용 · 개발 촉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의 이용 ·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

- 국민소득 증대, 주 5일 근로제 정착 등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관광욕구에 따라 해양관광도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

- 해양관광도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모험적 여가활동 증대로 무인도서 탐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용·개발 축진을 통한 국민휴식공간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필요
 - 무인도서의 방치 내지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토공간자원으로서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 인식 확산
 - 무인도서의 원시성 자원을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활용으로 매력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나. 추진방향

- 해양레저활동 등의 활성화를 통한 이용가능무인도서 활용 확대
- 예산지원 등을 통한 개발가능도서의 개발 및 지역활성화 유도

다.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무인도서 이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양질의 무인도서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탐방지원센터 시범·운영
 -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와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탐방지원센터 단계적 설치 확대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4 ~ '19년]
 - 이용가능도서별 특성에 적합한 허용행위 유형 발굴·안내
 - 탐방에 적합한 도서, 생태교육에 적합한 도서 등 허용행위별로 적합한 도서를 Grouping하여 무인도서 포털시스템, 행정기관 등을 통해 보급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2 ~ '13년]
 - 입도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연도 : '11년]

□ 무인도서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탐방·생태체험의 요람으로 육성

- 청소년의 무인도서 탐방 및 생태체험 학습을 장려하고, 일반국민·교사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무인도서 탐방·체험 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정제를 도입하여 무인도서 탐방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전문화·내실화 도모
 - 지역주민,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등을 무인도서 안내인으로 육성·활용
-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2 ~ '19년]

- 중·장기적으로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설치를 통해 탐방·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무인도서 탐방·체험 안내인’ 교육전문기관으로 육성
-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5 ~ '16년]

□ 공익성·규모가 큰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가고 싶은 무인도서 창출

- 개발로 인한 해양 및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인식 제고, 어촌체험 등 연계 관광 등으로 지역활성화가 큰 무인도서 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
 - 또한 기업의 연수원 건설 등 일정한 규모의 이용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무인도서 개발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 기간 : '11 ~ '19년]

□ 무인도서 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기준 마련 등

- 도로·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개발사업의 내용, 선정 및 지원규모 등 세부기준 마련
 - 또한 지원의 타당성, 대상 선정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칭 ‘개발지원 대상 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 연도 : '11년]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예 산 (백만원)	73,224	5,400	5,940	6,534	7,182	7,884	8,694	9,558	10,476	11,556

3.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특별관리

< 중점 추진과제 >

- 3-1 관리체계 기반 확립 및 실질적인 관리 강화
- 3-2 자연환경·생태계 실태조사 및 DB 구축
- 3-3 영해기점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과학적 시스템 마련
- 3-4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영해기점 재설정

3-1

관리체계 기반 확립 및 실질적인 관리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UN해양법협약('94년 발효)을 계기로 주변국의 해양관할권 강화·확대 정책에 적극적·능동적인 대비 필요
 - 일본은 해양기본법('07)·해양기본계획('08), 중국은 해도보호법의 제정('09)을 통해 제도적으로 도서관리 기반 구축
- 해양영토(영해·EEZ 및 대륙붕 등)관할권의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영해기점표 및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체계 확립 시급
 - 영해기점 근거법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영해설정 방법 및 기점 규정만 있을 뿐 기점 소재 도서 등의 실질적인 관리규정 부재
 -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매설('97~'02년)한 영해기점표 138개 중 2009.12월 현재 50개소가 멸실·훼손되었거나 접근로가 유실되는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09년 영해기준점 재조사 사업을 통해 서해안과 제주도 일대 영해기준점표 33개소 복구

<영해기준점표 훼손 사례>

구 분	과 거	현 재
흔적만 남은 경우		
매립 등 공사에 의한 망실		

<영해기준점 도서 현황>

구분	총계	직선기준점			통상기준점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유인도서	무인도서
계	138	23	3	20	115	16	99

나. 추진방향

- ☐ 관리주체의 명확화 및 역할분담에 따른 점검체계 구축
- ☐ 영해기준점무인도서 및 영해기준점표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
- ☐ 해양활동 보호 및 확대를 위한 영해기준점무인도서 기능 강화

다. 추진계획

- ☐ 영해기준점무인도서의 점검 및 훼손 방지 체계 구축

- 해양경찰청장은 영해기점무인도서(119개)에 대한 점검계획 및 일상 업무수행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형상의 훼손상태 점검
 -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고 그 결과를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 점검계획 또는 신고를 받고 형상 훼손상태를 점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 통보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해양경찰청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9년]
-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형상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 방지·복원 계획 수립·시행
 - 연간 무인도서 점검계획에 영해기점무인도서 훼손 방지·복원 계획을 포함·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경찰청장에 통보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 / 관계 : 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통상기점이 있는 도서의 형상 훼손 점검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직선기점은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행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무인도서관리법 상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은 해양경찰청장이나 육지에서 평균 1.5km 떨어진 통상기선 무인도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효율적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 기간 : '12 ~ '13년]

□ 영해기점표 손실·망실 여부 점검 및 복원 주체 명확화

-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매년 영해기점표의 설치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한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시행
 - 점검계획 또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훼손·멸실 또는 망실된 영해기점표를 발견한 경우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 영해기점표의 훼손과 관련된 신고를 받은 경우 해양경찰청장과 협조하여 점검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총괄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0 ~ '19년]

□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 협의체'를 구성,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국방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 영해기점도서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 영해기점 재설정, 영해기점 관련 주변국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
- 관계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의 시너지 효과 창출

[총괄 : 국토해양부 / 관계 : 외교통상부·국방부·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 / 연도 : '11년]

- 해양관할권 갈등, 핵심 해역별 해상활동의 안정적 지원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영해기점무인도서 거점 정비 방안 마련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4년]

□ 육지 인접 소재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에 민간부분 참여 촉진

- 영해기점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 무인도서 실태조사 경험자 및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을 명예관리원으로 위촉해 무인도서 관리에 활용

- 영해기점무인도서 전담 명예관리원으로 활용하고,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지침 마련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2 ~ '19년]

3-2

자연 환경·생태계 실태조사 및 DB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미흡

- 체계적인 기점관리를 위한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의 지형·지질 및 생태계에 대한 축적된 정보가 없는 상태

- 특히 동해안에는 영해기점의 대부분이 간조노출지에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대축적 해도가 없는 상황

- 영해기점 소재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의 특성, 해저의 지형·지질, 수로 등 상세한 정보가 반영된 대축척 해도 제작 필요
- 현재 대축척 해도(1/10,000)는 항해안전용으로 제작·보급되어 있는 실정으로 해양경제획정 등에 대비해 상세 정보가 반영된 대축척 해도 제작 시급

나. 추진방향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실태조사·DB 구축

☐ 영해기점 주변 대축척 해도 단계별 제작 추진

다. 추진계획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 해양영토관리 기반강화를 위해 통상기점 무인도서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직선기점 무인도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실태조사 추진(2년 주기)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 / 연도 : '12·'14·'16·'18년]

- 주변해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실시(5년 주기)
 - 해양영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축적·관리하기 위해 주변해역 수로조사를 추진하고, 항공레이저측량(LiDAR) 등을 이용한 고밀도 해저지형 실측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 / 연도 : '12·'17년]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대축척 해도 제작 추진

- 수심, 조류 및 해저지형 등 상세정보를 수록한 대축척해도(1/10,000 이하)

제작을 추진하되, 직선기점 소재에 대해 우선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2~'18]

3-3

영해기점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해양경계획정 회담 대비 영해기점 소재 조위 자료 축적 필요

- 영해·EEZ 등 해양영토의 외측한계를 결정하는 기점 소재 해안 저조선 변화에 대한 장기적이고·정확한 과학자료 축적 시급
 - 국제수로기구는 해안 저조선의 기준면을 최저천문조위를 권장하고 있고 주변국도 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적극 대처 필요
 - * 최저천문조위를 해안 저조선의 기준면으로 하는 경우 관할해역 확대
 - 지구온난화와 연안매립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영해기점 저조선의 장기변화 자료의 지속적인 확보 요구

☐ 영해기점표의 전자기점화 필요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판 재질의 영해기점표는 거친 해양환경으로 부식성이 높고 파도 등에 의해 멸실·훼손 등이 빈번한 상황
- 또한 장기적으로는 기점의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영해기점표의 전자기점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나. 추진방향

☐ 영해기점 해양조위 관측소 설치 추진

☐ 영해기점무인도서 전자기점 관리시스템 도입

다. 추진계획

□ 주요 영해기점무인도서 등에 조위 관측소 설치 단계적 추진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확정 대비 주요 영해기점무인도서에 해양(조위) 관측소 설치를 통한 저조선의 과학적 자료의 지속적 축적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2 ~ '19년]

<설치대상 영해기점무인도서>

직선기선 기점		통상기선 기점	
연도	총 13개	연도	총 7개
'12	소령도, 홍도(전남), 소국흘도	'16	저진단(강원도 고성)
'13	상왕등도, 간여암, 홍도(경남)	'17	백령도, 소청도
'14	어서도, 고서, 절명서	'18	소연평도, 신도(인천 옹진군)
'15	상백도, 횡도, 사수도, 호미곶	'19	비양도(제주), 망상(강원도 동해)

□ 영해기점표의 전자기점 시스템화 추진

- 부식성이 높은 동판 재질을 개선하고, RFID(먼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하여 138개 영해기점표의 전자기점화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2 ~ '14년]

<관측소 설치 및 전자기점화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12	'13	'14	'15	'16	'17	'18	'19
예 산 (백만원)	16,738	2,112	2,420	2,609	2,928	805	1,771	1,949	2,144

3-4

관리여건 변화에 따른 영해기점 재설정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방파제건설 등으로 인해 직선기선 기점 일부(3개 기점*)가 내륙화 되어 실질적인 기준점으로서의 의미 상실

* 달만갑(직선기점 1, 포항), 화암추(직선기점 3, 울산), 범월갑(직선기점 4, 울산)

- 직선기선 기점인 직도는 공군의 연습사격으로 인한 형상이 많이 훼손되어 영해기점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나. 추진계획

- 육지화된 직선기선 기점에 대해서는 해양영토 확장관점에서 방파제 바깥 바다쪽으로 기점을 재설정하고 해도 개정 추진

-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총괄 :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관계 : 국립해양조사원 / 기간 : '18 ~ '19년]

- 직도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방안 마련

[총괄 : 외교통상부 · 국토해양부 / 관계 : 국방부 / 기간 : '18 ~ '19년]

4. 교육 · 홍보 강화

< 중점 추진과제 >

- 4-1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4-2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 홍보 체계 구축
- 4-3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무인도서 관리역량 강화
- 4-4 무인도서 정책연구 · 교육기관 지원 · 육성

4-1

관리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현황 및 문제점

- ☐ 무인도서관리법 시행 초기단계로 무인도서 담당공무원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과 업무수행 능력 제고 필요
 -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각종 교육교재, 관련 법령 해석집 등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이 시급한 실정
-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시스템 마련 시급

나. 추진방향

- ☐ 무인도서 관리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도화
- ☐ 무인도서 관리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업무편람 등의 발간·지원

다. 추진계획

-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무인도서 관리 과정’ 편성·운영
 -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방해양항만청,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기관 무인도서 담당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제고
 - 또한 무인도서 담당공무원·명예관리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 편성·운영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 기간 : ’11 ~ ’19년]
- ☐ 무인도서 법제, 정책 등에 대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 무인도서 업무편람, 법령 해설집, 무인도서 관리지침 등 무인도서 담당자의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각종 관련 자료집의 발간·배포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관리정책 워크숍 정기적 개최

- 무인도서 정책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Feed-Back을 통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주기적인 무인도서 담당공무원 정책워크숍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관계 : 지방해양항만청·국립해양조사원·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4.2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체계 구축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전략 부재로 무인도서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국민의 정책 순응도 미흡

- 유인도서와 같이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무인도서 및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
- 또한 지역주민, 낚시객 등 인위적인 외부간섭에 의해 무인도서의 생태계 훼손 및 교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홍보 시급

□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무인도서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친화적 이용·개발이 필요하나 홍보·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실정

-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여가 향유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무인도서의 특성상 탐방성·체험성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무인도서를 잘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상황

나. 추진방향

□ 무인도서의 중요성과 숨은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홍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무인도서 정보 제공 및 사이버 홍보 강화

□ 무인도서 탐방·체험가이드 지침 개발 및 안내인 양성·지원

다. 추진계획

□ 무인도서 관리유형별 특성에 입각한 맞춤형 홍보 추진

○ 해양관할권 기점인 영해기점무인도서는 해양영토의 확보와 강화를 위한 토대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국가해양정책 실효성 제고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중요 기점도서에 안내판 등의 설치를 통해 훼손 방지와 자발적 관리 유도 추진

- 종합정보체계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주변국가의 영해주권 정책이나 무인도서 관리 정책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해양영토 의식 증진 도모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1 ~ '13년]

○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육지와 다른 독특한 생태계나 지형·경관 등의 보전 필요성을 집중 홍보

- 미래세대도 보전무인도서의 가치를 향유하여야 할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전위주의 홍보를 추진하고 훼손 행위 등 감시활동도 병행 실시

- 보전무인도서는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파매체나 디지털 콘텐츠화 등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로 무인도서 가치 공유 확산 추진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해양경찰청 / 기간 : '10 ~ '19년]

○ 이용 또는 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자연 그대로의 기능과 모습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개발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

- 탐방·이용객을 위한 '무인도서 탐방·체험가이드', 개발사업자 대상 '환경친화적 무인도서 개발가이드' 책자 등을 마련 보급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관리 성공 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무인도서 인식 제고

-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 지정·관리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홍보
 - 생태계 향상도 측정, 주변해역 어업생산량 향상 등 비교가능한 지표를 통해 무인도서 관리효과 홍보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 관계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4·'18년]

- 지방자치단체별 이용여건이 우수한 이용가능무인도서를 지정하여 해양레포츠 등 무인도서 이용 활성화 모범사례 육성
 - 기업연수원·펜션단지 개발 등 환경친화적인 무인도서 개발 사례나 우수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발굴·홍보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지방자치단체 / 기간 : '14 ~ '19년]

□ 다양한 매체를 통한 무인도서 관련 정보 제공

- 무인도서 정책 및 가치와 실태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무인도서 전문블로그 운영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1 ~ '19년]

- 무인도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극복과 중요성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동식물 등의 사진·동영상 제공을 통해 현실감 있는 정보 제공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0 ~ '19년]

- 무인도서 관리 법령, 정책 및 그 가치 등을 수록한 '무인도서 가이드'를 인쇄물 및 전자책 등으로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1년]

- 무인도서에 대한 대국민 이해제고 및 관련 분야의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가칭 '아름다운 한국의 무인도서' 백서 발간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5년]

□ 참여적·체험적 행사를 통한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 체험형 관광수요 부응 및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무인도서 체험 안전수칙·준수사항 및 효과적 체험 방법 등의 개발·보급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연도 : '11년]

- 무인도서를 주제로 한 공모전·전시회, 정기적인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대국민 무인도서 가치 의식 제고와 도서정책 개선에 활용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1 ~ '19년]

4-3

지역주민의 자발적 무인도서 관리역량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주변지역 주민들에 의한 무인도서의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무인도서의 가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미흡한 상황
- 지역주민의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자발적·일상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책임의식 고취와 행정기관의 관리역량의 한계 극복 필요
- 지역활동이 무인도서보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인센티브 확보에 어려움 존재

나.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관리에 참여하는 무인도서 입양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 지역주민 등을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으로 지정 및 활용

다. 추진계획

- 시·도별 역량있는 지역 어촌계에 무인도서의 관리를 시범 위탁
 - 관리유형별 관리지침을 개발·제공하고 관리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어촌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촉진
 -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10개 도서를 우선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통해 확대 실시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 · 지방해양항만청 / 관계 : 지방자치단체 / 기간 : '15 ~ '19년]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유사 사례를 수집 · 분석하여 시범사업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총괄 · 시행 : 국토해양부 : '14년]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밀착형 무인도서 관리

- 무인도서 주변지역 주민 및 실태조사원 등을 명예관리원으로 활용, 행위제한 · 출입제한 및 형상훼손 등의 감시활동을 통한 관리 강화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의 적극적인 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예산 확보 및 무인도서 관리유형별 관리 지침 마련 · 제공

[총괄 : 국토해양부 / 시행 : 국토해양부 · 지방해양항만청 / 기간 : '11 ~ '19년]

4-4

무인도서 정책연구 · 교육기관 육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무인도서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나 무인도서 정책개발 또는 조사 ·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태
- 무인도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 홍보 및 각종 체험프로그램 개발 ·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필요

나. 추진방향

- 대학 등을 활용한 무인도서정책 조사 · 개발
-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무인도서정책 연구기반 마련

다. 추진계획

□ 대학 등 기존 연구기관 활용을 무인도서정책 조사·개발

-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무인도서 실태조사 관여 대학, 연구원 등을 통해 외국의 무인도서정책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1 ~ '19년]

□ 중장기적으로는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설립 지원 및 육성

- 무인도서의 보전·관리에 대한 외국 정책의 조사·연구, 교육·체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홍보 수단·내용 개발 등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총괄·시행 : 국토해양부 / 기간 : '15년]

V. 연차별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

1. 연차별 투자계획

☐ 총괄

○ 4대 기본실천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총 1,471억원 투자

투자분야	합 계	연도별 투자소요(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147,146	1,990	8,465	17,402	15,229	18,199	17,657	16,693	16,219	18,039	17,253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12,773	1,973	3,041	3,330	1,391	576	403	444	488	537	590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104,267	-	5,402	9,680	10,641	12,739	12,916	13,180	12,141	13,618	13,950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25,334	-	-	3,601	2,933	3,841	3,622	2,344	3,369	3,129	2,495
교육·홍보 강화	4,772	17	22	791	264	1,043	716	725	221	755	218

* 다만, 상기 연차별 투자소요액은 행정수요를 예상하여 개산(概算)한 추정치로 관계 부처 협의나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계획별 세부 투자계획

○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투자분야	합 계	연도별 투자소요(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12,773	1,973	3,041	3,330	1,391	576	403	444	488	537	590
실태조사조기 완료 추진	9,274	1,973	3,005	3,215	776	305	-	-	-	-	-
종합정보체계 구축	760	-	-	-	447	41	45	49	54	59	65
관리체계 확립 및 강화	2,739	-	36	115	168	230	358	395	434	478	525

○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투자분야	합 계	연도별 투자소요(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104,267	-	5,402	9,680	10,641	12,739	12,916	13,180	12,141	13,618	13,950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21	-	-	11	5	5	-	-	-	-	-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2,844	-	2	146	163	783	22	756	27	913	32
미등록 무인도서 등의 관리	19,865	-	-	3,331	3,662	3,650	3,896	2,579	1,364	563	820
훼손 생태계 복원 및 형상 복구	2,880	-	-	252	277	305	335	369	405	446	491
보전무인도서 내 사유지 매입	4,470	-	-	-	-	740	740	740	740	741	769
이용·개발 촉진	74,187	-	5,400	5,940	6,534	7,256	7,923	8,736	9,605	10,955	11,838

○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투자분야	합 계	연도별 투자소요(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25,334	-	-	3,601	2,933	3,841	3,622	2,344	3,369	3,129	2,495
관리체계 기반 확립	2,262	-	-	180	199	418	240	264	290	320	351
실태조사 및 DB구축	6,334	-	-	1,308	315	814	454	1,275	1,307	861	-
과학적 시스템 구축	16,738	-	-	2,113	2,419	2,609	2,928	805	1,772	1,948	2,144

○ 교육·홍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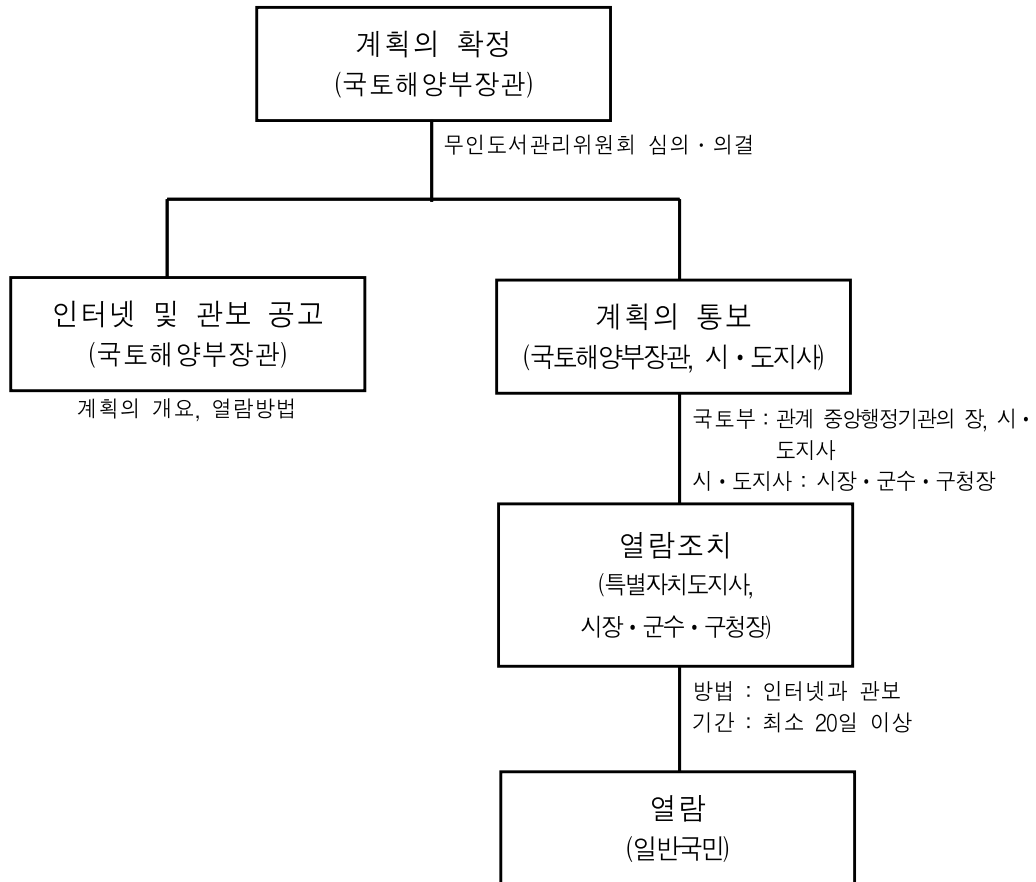
투자분야	합 계	연도별 투자소요(백만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합 계	4,772	17	22	791	264	1,043	716	725	221	755	218
관리역량 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220	17	13	15	16	24	27	21	23	25	39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3,020	-	9	676	148	699	349	562	24	553	-
자발적인 무인도서 관리역량 강화	322	-	-	-	-	200	20	22	24	27	29
정책연구·교육기관 육성	1,210	-	-	100	100	120	320	120	150	150	150

2. 계획의 시행 및 추진일정

□ 계획의 시행

- 국토해양부장관은 본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계획은 공고일부터 시행하고, 공고는 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로 하며, 통보는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방식으로 함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이 전자적 방법으로도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0일 이상 기간을 두도록 함

<계획의 시행 흐름도>



□ 관계기관 협조 및 조치사항

- 무인도서 점검기관(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본 계획 중 소관사항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010. 9. 30.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및 시행
 - 점검기관별 무인도서 연간 점검계획은 본 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본 계획을 기본지침으로 관할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개발을 위한 예산·인력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010. 9. 30.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및 시행
- 무인도서 점검기관 및 시·도지사는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매년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 반영

- * 무인도서 점검기관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예산지원은 매년 12월 익년도 실행 예산이 확정된 후 재배정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 과제별 추진일정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기간('10 ~ '19년) 중 4개 분야 20개 세부과제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	추진단계		
			1단계('10-'13)	2단계('14-'17)	3단계('18-'19)
관리기반구축	무인도서관리제도정비	관리유형 재구분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 관리확대 추진	○		
		절대보전·준보전 도서 등의 자연휴식년제 도입	○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실태조사조기완료추진	무인도서 및 주변해역 실태조사 완료	○		
		환경부 실태조사 자료 활용방안 마련	○		
		관리유형 이의 무인도서 합동조사 방안 수립 및 조사 완료	○	○	
	종합정보체계구축	연안포털 활용 실태조사 자료 DB화 및 정보제공	○		
		독립 Web 기반 종합정보체계 구축안 마련	○		
		관련 기관간 사이트 연계 추진	○		
		독립 Web 기반 종합정보체계 구축 완료	○		
		종합정보체계 관리인력 보강 및 운영지침 마련	○		
	관리체계확립 및 강화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주체별 관리매뉴얼 마련	○		
		명예관리원 운영 방안 마련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운영결과 평가·확대 실시		○	○
	관리재원확보 및인력보강	무인도서 관리재원의 지속 확충	○	○	○
		절대보전·준보전 도서의 국민신탁 방안 추진		○	
		무인도서 관리 소요인원 확보	○		
	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	무인도서 관리 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마련	○		
		무인도서 전문가 Pool 구성 및 활용방안 마련	○		
		무인도서 공동사업 발굴		○	
		무인도서 위치도 및 주제도 등 공동 제작		○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	추진단계		
			1단계('10-'13)	2단계('14-'17)	3단계('18-'19)
관리유형별 체계적 관리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관리유형 지정 흐름도 및 기본지침 수립	○		
		관리유형(안)에 대한 의견수렴 다양화	○		
		등록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완료	○		
		미등록 무인도서의 등록 후 관리유형 지정	○	○	
		보전 및 이용가능도서 지형도면 작성·고시	○	○	
		관리유형 이외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	○	○	
	유형별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점검기관별 연간 점검계획 수립·시행	○	○	○
		절대보전 무인도서 세부관리방안 마련	○		
		◦ 행위제한 등 위반시 처벌 내용 교육·홍보	○	○	○
		◦ 주기적인 위반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	○	○	○
		◦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	○	○	
		◦ 격년별 생태계 등 모니터링	○	○	○
		◦ 명예관리원 감시·계도 등에 활용	○	○	○
		준보전 무인도서 세부관리방안 마련	○		
		◦ 행위제한 등 위반시 처벌 내용 교육·홍보	○	○	○
		◦ 주기적인 위반행위 점검 및 지도·단속	○	○	○
		◦ 행위제한 안내판 설치	○	○	
		◦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 기준 마련	○		
		◦ 일시적 출입제한 안내판 설치·홍보	○	○	○
		◦ 명예관리원 감시·계도 등에 활용			
		이용가능무인도서 세부관리방안 마련	○		
		◦ 이용행위별 세부관리방안 수립	○		
		◦ 이용가능도서별 최적 이용행위 DB화		○	
		◦ 이용행위 지원시설 종류·범위 마련	○		
		◦ 시설설치 국고지원 기준 수립	○		
		◦ 이용가이드 책자 발간	○		
		◦ 명예관리원 감시·계도 등에 활용	○	○	○
		개발가능무인도서 세부관리방안 마련	○		
		◦ DB 구축을 통한 진행중인 개발도서 관리	○	○	○
		◦ 불법 개발행위 정기점검 추진	○	○	○
		◦ 개발완료 무인도서 사후관리	○	○	○
		◦ 행정기관 승인 불요 개발의 사전신고 홍보	○	○	○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	추진단계		
			1단계('10-'13)	2단계('14-'17)	3단계('18-'19)
	미등록 무인도서 등의 관리	실태조사 결과자료와 상이한 도서의 DB관리	○		
		미등록 무인도서 지적측량 등 등록 추진	○	○	
		미등록 무인도서 명칭 부여	○		
		미존재 등록 무인도서 등록 말소 추진	○		
		위치 등 정보가 부정확 등록도서 정정 추진	○		
		해안선 정밀조사	○	○	○
	훼손생태계 복원 및 형상복구	훼손 생태계 관리 DB 구축	○		
		훼손 유형별 관리 및 복원·복구 매뉴얼 마련	○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		
		훼손 영해기점무인도서 복구 지침 마련	○		
	보전 무인도서 사유자매입	매수대상 범위 및 우선 순위 원칙 마련	○		
		매수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		
		매수계획 수립·홍보 및 매수 추진		○	○
	이용·개발 촉진	탐방지원센터 시범사업 계획 및 운영 지침 마련	○		
		탐방지원센터 시범 설치·운영		○	
		탐방지원센터 운영 평가 및 확대 설치		○	○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		
		개발유형별 사업승인기준 마련	○		
		개발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 선정 세분기준 수립	○		
		개발지원 대상 선정 심의회 구성	○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	관리체계 기반확립 및 실질적인 관리강화	세부관리 방안 마련	○		
		관리주체별 협력체제 강화	○	○	○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 협의체 구성	○		
		영해기점무인도서 점검계획 수립·시행	○	○	○
		영해기점표 점검계획 수립·수행	○	○	○
		영해기점무인도서 명예관리원 업무지침 마련 및 활용	○	○	○
		영해기점무인도서 거점 정비 방안 마련		○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 민간부분 참여 방안 수립	○		
	자연환경· 생태계 실태 조사및DB구축	실태조사 및 DB 구축 방안 마련	○		
		실태조사 추진	○	○	○
		대축척 해도 제작	○	○	○
	과학적 시스템 구축	영해기점 조위 해양관측소 추진계획 수립	○		
		해양관측소 설치 및 관측 자료 DB 구축	○	○	○
		영해기점표 전자기점화 추진	○	○	○
	영해기점 재설정	영해기점 재설정 관련 적정방안 마련			○
		영해기점 재설정 추진			○

중점 추진과제		추진방안	추진단계		
			1단계('10-'13)	2단계('14-'17)	3단계('18-'19)
교육홍보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무인도서 교육 과정 편성·운영	○	○	○
		무인도서정책워크숍 주기적 개최	○	○	○
		무인도서 업무편람·법령해석집 발간	○	○	
		관리유형별 무인도서 관리지침 발간	○	○	
	교육·홍보 체계 구축	영해기점 안내판 설치	○		
		지역주민 및 이용객 대상 홍보방안 마련	○		
		무인도서 관리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	○
		전문블로그 구축·운영을 통한 인식제고	○	○	○
		무인도서 안내(현황·정책·법령 등) 책자 발간	○		
		이용가능도서의 탐방·체험 가이드 책자 발간	○		
		개발가능도서의 환경친화적 개발 가이드 책자 발간	○		
		정책개선을 위한 국민인식 조사	○	○	○
		백서·사진전·전시회 등을 통한 인식제고	○	○	○
	자발적인 무인도서 관리역량 강화	시범 위탁대상 도서 및 관리자 선정 기준 수립		○	
		시범 수탁사업자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지역주민 대상 관리유형별 관리지침 마련		○	
		시범 수탁사업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시범 수탁사업자 선정		○	
		시범 사업 효과 평가 및 확대 실시			○
	정책연구 교육기관 육성	정책개발을 위한 학계 등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	○	○	○
		정책개발·안내인양성 등을 위한 기관 육성		○	
		제도개선을 위한 외국의 무인도서 제도 연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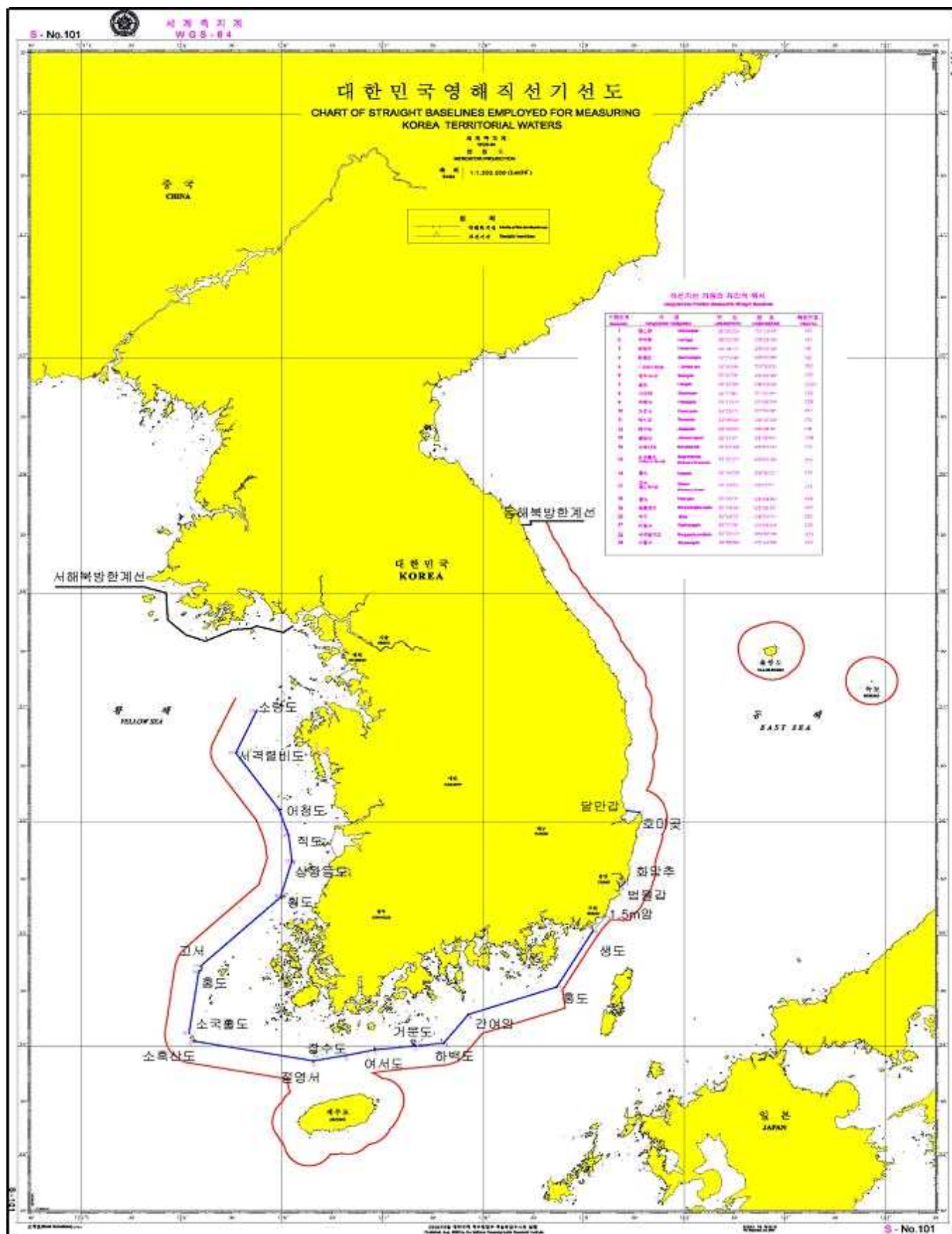
< 참 고 자 료 >

1. 직선기점 현황
2. 직선기선도 및 영해
3. 시·도별 무인도서 현황
4. 타법에 의한 무인도서 관리 현황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 현황
6. 지방자치단체 무인도서 개발계획 현황

1. 직선기점 현황

구 분	지 명	행정구역	유무인 여부	지적공부 등록여부	비 고
직선기점 1	달만갑	포항시	유인도	미등록	최외곽지역 아님 (포항 신항만 건설로 이전 필요)
직선기점 2	장기갑	포항시	육지부 부속 무인도	미등록	
직선기점 3	화암추	울산시	유인도	제방	최외곽지역 아님 (방파제 공사로 이전 필요)
직선기점 4	범월갑	울산시	육지부 부속 무인도	미등록	최외곽지역 아님 (울산 신항만 방파제 공사)
직선기점 5	1.5m 암	부산시 기장군	육지부 부속 무인도	미등록	
직선기점 6	생도	영도구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7	홍도	통영시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8	간여암	여주시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9	하백도	여주시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0	거문도	여주시	유인도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1	여서도	완도군	유인도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2	장수도(사수도)	북제주군/완도군	유인도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3	절명서	북제주군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4	소흑산도	신안군	유인도 부속 무인도	미등록	
직선기점 15	소국흘도	신안군	육지부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6	홍도	신안군	유인도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17	고서	신안군	무인도	제방	
직선기점 18	황도	영광군	유인도	임야	
직선기점 19	상왕등도	부안군	무인도	전	
직선기점 20	직도(소피도)	군산시	무인도	미등록	
직선기점 21	어청도	군산시	유인도 부속 무인도	임야	
직선기점 22	서격렬비도	태안군	무인도	미등록	
직선기점 23	소령도	옹진군	무인도	임야	

2. 우리나라 직선기선도 및 영해



3. 시·도별 무인도서 현황

가. 지적공부 미등록 도서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도서수	234	9	10	14	8	153	4	16	3	-	15	2
비 율	100	3.85	4.27	5.98	3.42	65.38	1.71	6.84	1.28	-	6.41	0.86

나. 소유형태별 도서 수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합 계		2,876	41	111	236	80	1,744	58	484	45	3	40	34
		100	1.43	3.86	8.21	2.78	60.64	2.02	16.83	1.56	0.10	1.39	1.18
단 독 소 유	소 계	2,742	40	107	219	80	1,678	54	445	42	3	40	34
		100	1.46	3.90	7.99	2.92	61.20	1.97	16.23	1.53	0.10	1.46	1.24
	국 유	1,327	31	56	107	52	741	39	201	33		40	27
		100	2.34	4.22	8.06	3.92	55.84	2.94	15.15	2.49		3.01	2.03
	공 유	145		7	41	6	53	8	18	3	3		6
		100		4.83	28.27	4.14	36.55	5.52	12.41	2.07	2.07		4.14
	사 유	1,270	9	44	71	22	884	7	226	6			1
		100	0.71	3.46	5.59	1.73	69.61	0.55	17.80	0.47			0.08
복 수 소 유	소 계	134	1	4	17		66	4	39	3			
		100	0.75	2.99	12.68		49.25	2.99	29.10	2.24			
	국·사유	87	1	4	8		40	3	31				
		100	1.15	4.60	9.19		45.98	3.45	35.63				
	공·사유	26			6		17		3				
		100			23.08		65.38		11.54				
	국·공·사유	15			2		7	1	3	2			
		100			13.33		46.67	6.67	20.00	13.33			
	국·공유	6			1		2		2	1			
		100			16.67		33.33		33.33	16.67			

다. 소유형태별 면적 현황

(단위 : km²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합 계	76.47	0.73	8.29	8.49	2.29	40.45	1.84	9.23	4.71	0.04	0.14	0.26
	100	0.96	10.84	11.10	2.99	52.90	2.41	12.07	6.16	0.05	0.18	0.34
국 유	22.16	0.35	2.45	2.67	1.69	7.84	0.70	2.69	3.51		0.14	0.12
	100	1.58	11.05	12.05	7.63	35.38	3.16	12.14	15.84		0.63	0.54
공 유	7.48		0.43	1.65	0.13	3.97	0.39	0.32	0.42	0.04		0.13
	100		5.75	22.06	1.74	53.08	5.21	4.28	5.61	0.53		1.74
사 유	46.83	0.38	5.41	4.18	0.47	28.64	0.75	6.21	0.78			0.01
	100	0.81	11.55	8.93	1.00	61.16	1.60	13.26	1.67			0.02

라. 지목별 현황

(단위 : km²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합 계	76.47	0.73	8.29	8.49	2.29	40.45	1.84	9.23	4.71	0.04	0.14	0.26
	100	0.96	10.84	11.10	2.99	52.90	2.41	12.07	6.16	0.05	0.18	0.34
임 야	69.01	0.73	8.05	8.02	1.82	38.59	1.80	8.44	1.12	0.04	0.14	0.26
	100	1.06	11.66	11.62	2.64	55.92	2.61	12.23	1.62	0.06	0.20	0.38
전	1.99	0.00	0.01	0.17		1.25	0.03	0.51	0.00			
	100	0.22	0.94	8.69		62.83	1.46	25.85	0.01			
답	0.31			0.07		0.29		0.01				
	100			2.27		93.96		3.77				
기타	5.16		0.23	0.29	0.47	0.33	0.00	0.26	3.59		0.00	
	100		4.37	5.63	9.02	6.30	0.08	5.01	69.53		0.05	

마. 면적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합 계	2,642	32	101	222	72	1,591	54	468	42	3	25	32
	100	1.21	3.82	8.40	2.73	60.22	2.04	17.71	1.59	0.11	0.95	1.21
0.003km ² 미 만	888	16	9	70	15	514	16	207	13		15	13
	100	1.80	1.01	7.88	1.69	57.88	1.80	23.31	1.46		1.69	1.46
0.003~ 0.01km ²	667		24	56	21	427	11	101	11	1	6	9
	100		3.60	8.40	3.15	64.02	1.65	15.14	1.65	0.15	0.90	1.35
0.01~ 0.05km ²	732	11	40	57	31	438	17	116	8	2	3	9
	100	1.50	5.46	7.79	4.23	59.84	2.32	15.85	1.09	0.27	0.41	1.23
0.05~ 0.1km ²	179	3	12	16		115	5	24	2		1	1
	100	1.68	6.70	8.94		64.25	2.79	13.41	1.12		0.56	0.56
0.1km ² 이 상	176	2	16	23	5	97	5	20	8			
	100	1.14	9.09	13.07	2.84	55.11	2.84	11.36	4.55			

바. 거리구간별 현황

(단위 : 개 / %)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합 계	2,642	32	101	222	72	1,591	54	468	42	3	25	32
	100	1.21	3.82	8.40	2.73	60.22	2.04	17.71	1.59	0.11	0.95	1.21
1km 미만	1,392	15	11	82	4	923	9	279	29	3	9	28
	100	1.08	0.79	5.89	0.29	66.31	0.65	20.04	2.08	0.22	0.65	2.01
1~5km	628	13	22	62	2	409	8	100	7		1	4
	100	2.07	3.50	9.87	0.32	65.13	1.27	15.92	1.11		0.16	0.64
5~10km	146	2	6	16	4	99		15	4			
	100	1.37	4.11	10.96	2.74	67.81		10.27	2.74			
10~20km	158	2	21	9	18	48		58	2			
	100	1.27	13.29	5.70	11.39	30.38		36.71	1.27			
20~40km	131		35	23	38	19		16				
	100		26.72	17.56	29.01	14.50		12.21				
40~80km	99		6	30	6	20	37					
	100		6.06	30.30	6.06	20.20	37.37					
80km 이상	88					73					15	
	100					82.95					17.05	

4. 타법에 의한 무인도서 관리 현황

가. 타법 지정지역 등 현황

소관부처	법 률 제 명	지역 · 지구 등 지정명칭(조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영 제3조)
국 방 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제5조), 비행안전구역(제6조)
행 정 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절대보전지역(제292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관광지(제52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제2조), 국가지정문화재(제5조 · 제7 · 제8조), 국가지정문화재구역(제9조),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영 제52조), 시도지정문화재구역(제2조 · 제9조 · 제71조)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제2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안림(제43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제47조)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제4조), 산지전용제한구역(제9조)
	수산업법	보호구역(제31조)
	어촌 · 어항법	어항구역(제17조)
	초지법	초지(제5조)
지 식 경 제 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제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지역(제2조, 영 제4조)
환 경 부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특정도서(제4조)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제8조)
	야생동 · 식물보호법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제33조)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제4조), 공원자연보전지구 · 공원자연환경지구 · (제18조), 도립공원(제4조의3)
	자연환경보전법	생태 · 경관보전지역(제12조)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제22조)
국 토 해 양 부	도로법	도로구역(제24조), 접도구역(제4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제6조)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제5조)
	연안관리법	연안육역(제2조)
	항공법	수평표면구역 · 원추표면구역 · 진입표면구역 · 전이표면구역(영 제10조의2)
	항만법	연안항(제3조)

나. 시·도별 지역·지구 등 지정 현황

(단위 : 개)

소관기관	지역·지구·구역 등	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교육과학기술부	상대정화구역	1							1				
국방부	통제보호구역	12	1	3	2	1			5				
	제한보호구역	14		7					7				
	비행안전구역	12				2	3		1	6			
행정안전부	절대보전지역	7						7					
문화체육 관 광 부	관광지	7				1	1						5
	문화재	11		4	1		2	1	3				
	국가지정문화재	7							6	1			
	국가지정문화재구역	41			2		4	6	8	8		13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500미터 이내	21		3				17	1				
	시도지정문화재구역	1											1
농림수산 식 품 부	농업진흥구역	4					4						
	농업보호구역	1					1						
	보안림	16					1	2	9				4
	산림유전자원보호림	6	1		2		2		1				
	보전산지	2									1		1
	준보전산지	1,038	3	4	68	27	487		421	3	2		23
	임업용산지	378	14	22	35	11	231		62				3
	공익용산지	381	1	5	49		154	5	149	3		14	1
	산지전용제한지역	26	1				18		6				1
	보호구역	33					29		1	3			
	어항구역	7	4				1	1					1
	초지	2		2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	4					1	3					
	성장관리지역	2	2										
환경부	특정도서	166		26	16	12	68	2	39	3			
	습지보호지역	3	1							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			1				4				
	국립공원	275					177		98				
	공원자연보전지구	33					7	25	1				
	공원자연환경지구	71			30		1	16	24				
	도립공원	7						7					
	생태·경관보전지역	5						3		2			
	특별대책지역	1									1		
국토해양부	도로구역	1		1									
	접도구역	1		1									
	국가산업단지	5					4				1		
	성장관리권역	37	20	17									
	신항만건설예정지역	3					3						
	연안육역	81	26		6			49					
	수평표면구역	5		1			4						
	원추표면구역	6		2			4						
	진입표면구역	14		2			12						
	전이표면구역	7					7						
	연안항	1		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분 현황

가. 총괄

□ 용도구분 총괄

(단위 : km² / %)

구 분		합 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합 계	개수	2,940	33	105	244	72	1,740	58	583	43	3	25	34
	%	100	1.12	3.57	8.30	2.45	59.18	1.97	19.83	1.46	0.10	0.85	1.16
	면적	82.85	0.79	8.35	8.70	2.29	43.62	2.10	11.77	4.73	0.04	0.14	0.31
	%	100	0.95	10.07	10.50	2.76	52.66	2.54	14.21	5.71	0.05	0.17	0.38
용 지 역	개수	2,283	30	89	143	72	1,439	42	389	39	2	13	25
	%	100	1.31	3.90	6.26	3.15	63.03	1.84	17.04	1.71	0.09	0.57	1.10
	면적	70.38	0.72	7.33	7.19	2.29	38.47	1.54	8.34	4.16	0.03	0.09	0.22
	%	100	1.02	10.41	10.22	3.25	54.66	2.19	11.85	5.91	0.05	0.13	0.31
용 지 구	개수	12		4	1			3	2				2
	%	100		33.33	8.33			25.00	16.67				16.67
	면적	0.44		0.06	0.09			0.06	0.08				0.05
	%	100		12.69	20.64			36.78	18.04				11.85
용 구 역	개수	286	1		21		149	1	113	1			
	%	100	0.35		7.34		52.10	0.35	39.51	0.35			
	면적	5.93	0.06		0.11		3.17	0.10	2.46	0.02			
	%	100	1.06		1.84		53.46	1.76	41.56	0.32			
미구분	개수	359	2	12	79		152	12	79	3	1	12	7
	%	100	0.56	3.34	22.01		42.34	3.34	22.01	0.84	0.28	3.34	1.95
	면적	6.09	0.01	0.96	1.30		1.98	0.30	0.89	0.55	0.01	0.05	0.04
	%	100	0.17	15.79	21.39		32.57	4.89	14.57	9.04	0.11	0.85	0.63

나. 용도지역 현황

□ 단일용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개 / km²)

용 도 지 역			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도시지역	주거 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 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6 1.08					13 0.63		1 0.00	1 0.43	1 0.02		
		준공업지역	1 0.01							1 0.01				
	녹지 지역	보전녹지지역	13 0.88		1 0.07			6 0.36	6 0.44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40 7.10	9 0.27	8 0.48	10 0.23		42 0.68	1 0.10	33 1.64	33 3.65	1 0.02		3 0.03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619 15.73	3 0.09	43 5.37	32 0.42	45 0.96	445 8.61		42 0.24				9 0.03
	생산관리지역		63 1.21		1 0.08		5 0.03	47 0.88		10 0.22				
	계획관리지역		95 3.43		3 0.06	1 0.09	1 0.03	75 3.05		10 0.17				5 0.05
	미세분		10 0.55			6 0.30			4 0.25					
농림지역			463 19.23	5 0.21	32 1.26	36 3.72	18 1.16	266 10.73		98 2.04				8 0.11
자연환경 보전지역			825 19.84	13 0.14		50 1.77		534 13.20	30 0.74	185 3.89			13 0.09	

□ 복수용도지역 지정 현황

(단위 : 개 / km²)

구분	합계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미 구분
합계	36* 1.27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 주거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전용 공업																				
일반 공업										1 0.00				1 0.01						
준 공업																				
보전 녹지																			1 0.00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관리																		15 0.98		
생산 관리																				
계획 관리																		1 0.05		
농림																			14 0.18	
자연환경 보전																				
관리 미구분																		1 0.02	2 0.02	

* 복수용도지역은 총 38개 도서로 2개 도서는 3개 용도지역이 지정(일반공업+준공업+자연녹지, 일반공업_준공업+일반상업)

다. 용도지구 지정 현황

(단위 : 개 / km²)

구 분	합 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합 계	12 0.44		4 0.06	1 0.09			3 0.16	2 0.08				2 0.05
자연환경												
수변환경												
시가지환경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최고			4 0.06									
최저												
방화												
방재												
문화자원												
보존												
중요시설												
물보존												
학교시설												
보호												
공용시설												
보호												
항만시설												
보호												
공항시설												
보호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주거개발												
진흥												
산업개발												
진흥												
유통개발												
진흥												
관광휴양	8 0.39			1 0.09			3 0.16	2 0.08				2 0.05
개발진흥												
복합개발												
진흥												
특정개발												
진흥												
특정용도												
제한												

라. 용도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 / km²)

구 분	합 계	경기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합 계	286	1		21		149	1	113	1			
	5.93	0.06		0.11		3.17	0.10	2.46	0.02			
개발제한 구 역	6	1						5				
	0.45	0.06						0.39				
도시자연 공원구역	2						1		1			
	0.12						0.10		0.02			
시 가 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278			21		149		108				
	5.35			0.11		3.17		2.07				

6.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 개발계획 현황

지자체	행정 구역	도서명	면적 (㎡)	육지와 거리(km)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예산조달	비 고
화성시	서신면	안고림섬	62,776	0.2	고림섬 공원화계획	수변테크, 해안산책로 등	'09~'13	166	지방비	육지연계 개발
보령시	웅천읍	석대도	91,583	1.0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콘도미니엄 1식	'88~'11	2,154	민관합작	육지연계 개발
	오천면	명덕도	27,769	21.0	호도종합개발계획	탐방로, 전망대 등 생태공원조성	'09~'13	13	국·지방비	무인도서 연계개발
고흥군	동일면	시호도	415,870	0.9	섬관광 자원개발	원시체험의 섬개발	'09~'15	19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동백도	8,132	3.3	전남 해양리조트단지 조성사업	해양테마 펜션단지 개발	'07~'10	1,539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도양읍	상송도	57,819	0.5	전남 조선탐운 유치사업	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주거단지 조성 사업 (녹동 신항과 인접, 일대 350만㎡ 부지)	'07~'10	5,23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하송도	3,769	0.6						
		하송1도	2,935	0.6						
장흥군	용상면	오도	14,805	0.5	소등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진입로 등 해양친수공간 조성	'08~'12	3	국·지방비	육지연계 개발
해남군	문내면	녹도	488,195	0.2	휴양의 섬 녹도개발	가족호텔, 골프장 등	'10~'15	39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신안군	증도면	도덕도	77,851	0.5	휴&에코 리조트 조성사업	리조트(28동), 유물박물관, 수상비행 장, 모노레일, 향토음식촌 등	'09~'15	1,071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임자면	굴도	79,340	9.9	팰리스힐아일랜드 조성사업	해양펜션(34동), 에너지테마파크, 해수 온천, 횡타운, 요트마리나 등	'09~'15	441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지도읍	안마도	270,000	0.3	젓갈가공 공장 및 휴양의 집	젓갈공장(2동), 전통한옥마을(20동)	'11~'15	12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소북기도	174,300	0.8	천주교 피정의 집	성지순례기도원, 휴양소, 천주교성당	'11~'15	4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안좌면	상사치도	880,000	0.8	중국의 섬	중국 10대 건축물·절경 축소 설치, 중국 전문 음식점, 문화관, 사신관 등	'12~'16	30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암태면	말목도	129,000	0.3	다이어트의 섬	건강클리닉·요가센터, 가족형콘도 등	'11~'15	35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비금면	송탄도	162,446	1.3	자연의 섬	화훼원, 생태공원, 조각공원 등 조성	'12~'16	597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토막도	157,884	2.4	휴양의 섬	마리나시설, 승마체험코스 등 조성	'12~'16	15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우세도	223,338	0.5	아시아의 섬	한류문화관, 한류전문쇼핑몰 등 조성	'12~'16	25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노대도	446,171	3.5	음악의섬	음악의전당, 조각정원, 시네마정원, 예술 동호인 마을, 예술체험센터 등	'11~'15	60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신의면	과부도	86,200	0.2	해양마리나리조트	마리나리조트, 요트계류장, 해수탕 등	'12~'16	50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송도	7,934	0.8	평화의 섬	평화광장 조성, 노벨평화상 역사 수상자 전시관 건립 등	'12~'16	10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사하구	다대동	목도	47,603	1.0	해중피쉬파크조성	산책로 1식, 해중전망대 등	'09~'15	38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울릉군	북면	관음도	71,405	0.1	섬목-관음도간 보행 연도교, 관음도 탐방로 조성사업	보행 연도교 및 탐방로 조성	'09~'12	115	국 비	육지연계 개발
속초시	청호동	조도	13,984	1.4	도시기본계획변경 (도시자연공원→도시근린공원)	'20년 속초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완료 ('09.12월 고시예정)	'12~'15	50	민관합작	무인도서 단일개발
삼척시	원덕읍	해망도	3,175	0.1	삼척LNG 제4생산기지 건설	LNG저장탱크 14기, 부두, 방파제, 부대시설	'09~'13	28,000	민 자	무인도서 단일개발
고성군	죽왕면	죽 도	51,471	0.5	죽도 개발계획(안)	휴게전망대 및 탐방로	'12~'13	200	민관합작	육지연계 개발
		소죽도	1,112	0.4						